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

[최종보고서]

2017. 12.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 최종성과품을
제출합니다.

2017. 12



원장 강 현 수

| 차 례 |

제1장 과업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연구의 추진과정	5
제4절 연구 추진 체계	6

제2장 충남 외교의 여건과 문제점

제1절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9
1. 환황해권의 범위	9
2.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11
3.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주도성 확보	15
제2절 국제무대 지방외교의 부상	16
1. 지방외교의 정의와 범위	16
2. 지방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18
제3절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전환	21
1.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의 전환	21
2. 지방정부의 외교 드라이브	22
제4절 충남 외교의 현황	22
1.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	22
2. 충남외교의 두 축: 일상적 통상외교와 포럼외교	25
3. 충남 외교 전략의 부재	26
제5절 충남 지방외교 문제점	27
1. 글로벌 위상과 외교의 불균형	27
2. 전략적 관점의 미약	30

제3장 글로벌화 전략 사례 검토

제1절 충남도 환황해 전략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31
제2절 환황해 전략 관련 충남의 중장기 계획	34
제3절 지방 차원의 권역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39

제4장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기본구상

제1절 전략의 비전	47
1. 기존 비전체계에 대한 평가	47
2.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지위검토	49
제2절 핵심전략	51
1. 전략 수립의 원칙과 틀	51
2. 핵심 전략 영역	52
제3절 주요사업 제안	54
1.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54
2. 환황해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	57
3. 환황해 공생을 위한 핵심사업	68
4. 환황해 평화를 위한 핵심사업	82
제4절 전략의 추진체계	90
1. 총괄 추진 조직 설립의 필요성	89
2. 중장기 충남 외교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91
3. 환황해 포럼의 진화 방향	92

부록	
----------	--



제1장 과업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추진과정

제4절 연구 추진 체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는 역사적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①한·중·일 등 환황해 인접 국가들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②환황해권 역내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③글로벌 경제의 소비지로서 환황해권의 부상 등 의미가 있음.
- 단,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는 지난 17~19세기의 환황해권 시대와는 본질적인 차별성이 있으므로 그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충남은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충남은 지정학적으로 환황해권의 중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환황해권의 강한 발전이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조건임.
- 충남은 지난 20여 년 간 환황해권의 부상과 함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달라진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환황해권의 번영, 공생, 평화라는 담론과 충남의 발전 전략의 정책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임

- 번영, 공생, 평화라는 담론은 환황해권 발전의 요구로부터 도출되는 담론이기는 하나 이것과 충남도의 상황과는 정책적 간극이 엄연히 존재함
- 글로벌 담론과 지역적 발전 요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주요 정책, 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시대 도래의 의미를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함
-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과 이러한 핵심 전략을 구현할 정책을 제시함
- 정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단계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여 단기적인 추진체계와 장기적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모색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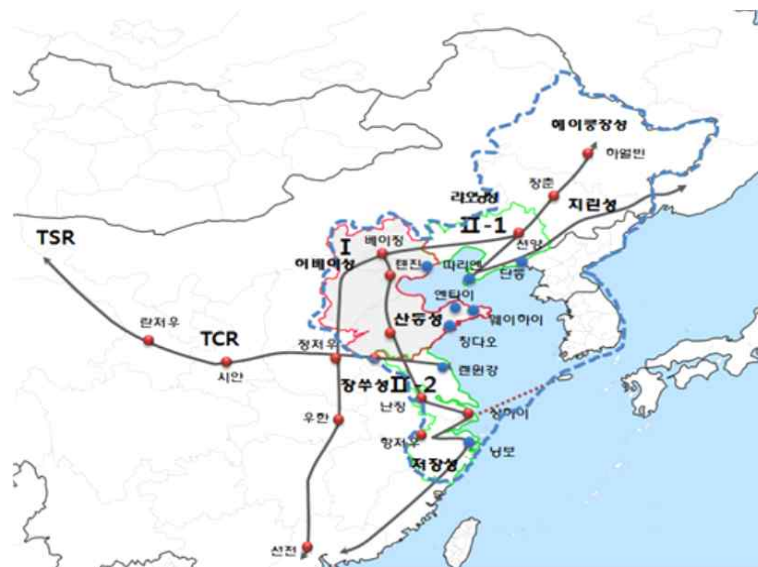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2030년

■ 공간적 범위

- 환황해 지역과 백제역사 교류지역 고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박인성, 2015, 충남연구원

■ 내용적 범위

- 환황해시대 충남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방안
- 지자체 차원의 환황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충남의 미래전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국제포럼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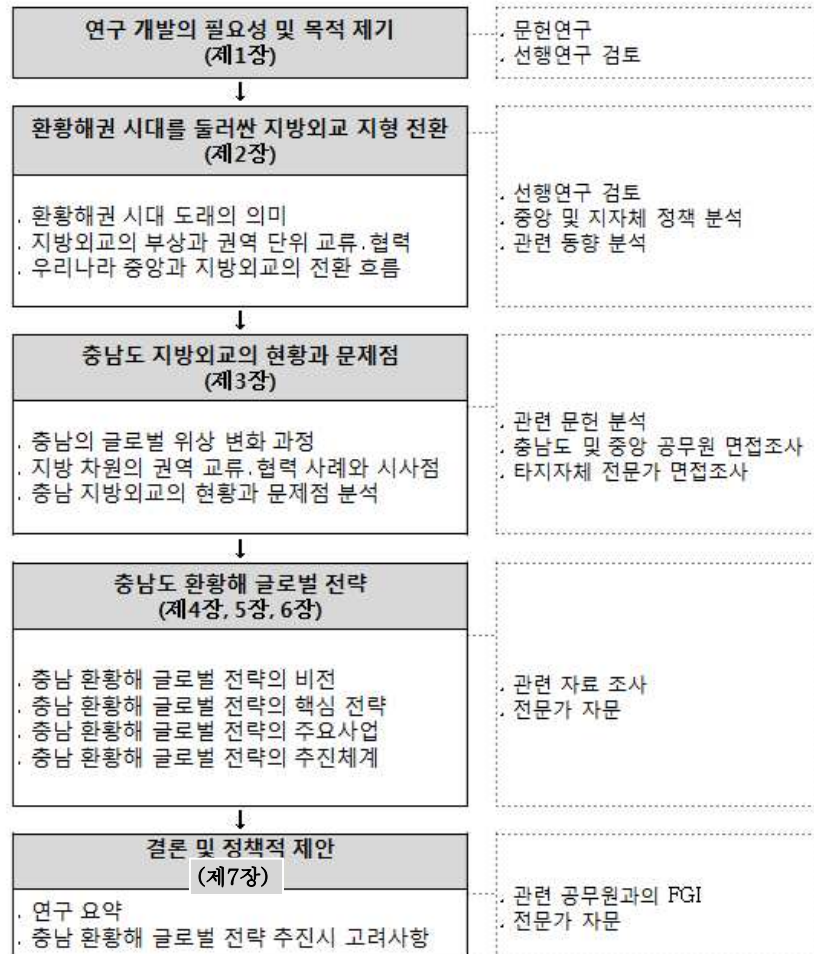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인터뷰 및 자문 등의 방식을 취함
 - 문헌연구는 지방외교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기존 충남 중장기발전 계획의 검토임
 - 인터뷰는 국내 지자체 연구원 및 공무원, 충남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각계 전문가(환황해 특별위원회 위원 포함) 자문을 포함함

- 충남도 환황해글로벌화 전략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문
 - 충남도 환황해 특별위원회는 외교, 중국, 경제, 산업, 미래연구, 행정, 문화, 해양, 언론, 환경, 여성 등 11개 분야 전문가 총 27명으로 구성됨

제3절 연구의 추진과정

1. 추진과정



[그림 1-2] 연구의 수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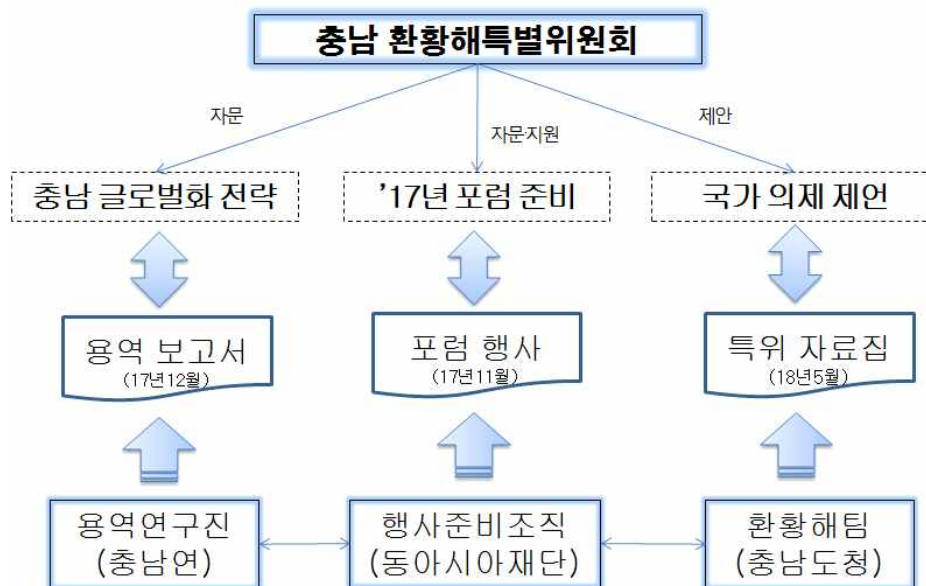
2. 세부추진과정

- 환황해특별위원회 자문회의, 실무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보고회 등을 통해 전략을 수립함
 - 2017.06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용역: 계약/착수/착수보고회
 - 2017.06 환황해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11개 분야 총 27명)
 - 2017.07 환황해 특별위원회 2차 회의
 - 2017.08 환황해 특별위원회 3차 워크숍
 - 2017.11 최종보고회

제4절 연구 추진 체계

1. 도 차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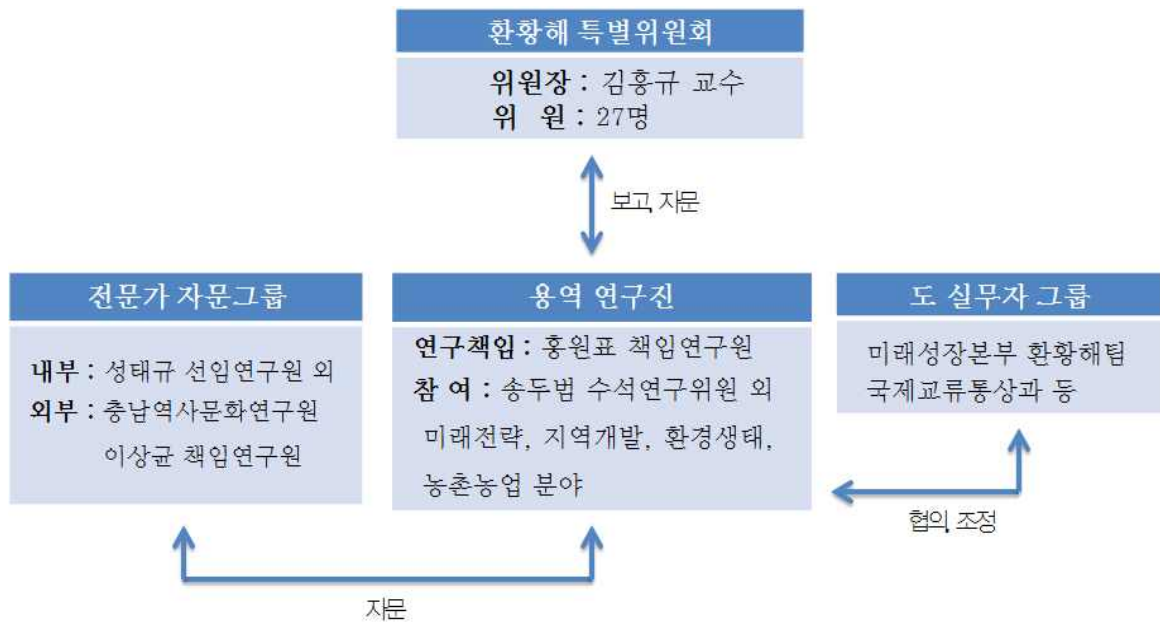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는 제3회 환황해포럼, 환황해특별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 상호 긴밀한 연계 체계 수립
 - 본 연구용역 수행을 환황해포럼 준비, 특위 활동과 긴밀히 연계
 - 단, 본 연구용역의 성과는 용역보고서로서 포럼행사, 특위활동보고서와는 구분됨
 - 황해특별위원회의 자문 아래 본 연구 용역 수행



[그림 1-3] 도 차원의 환황해글로벌화 용역 추진체계

2. 용역 수행 체계

- 용역 연구진을 충남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도청 실무자 그룹과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환황해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행



[그림 1-3] 용역 수행 체계



제2장 충남 외교의 여건과 문제점

제1절 환황해권 시대 도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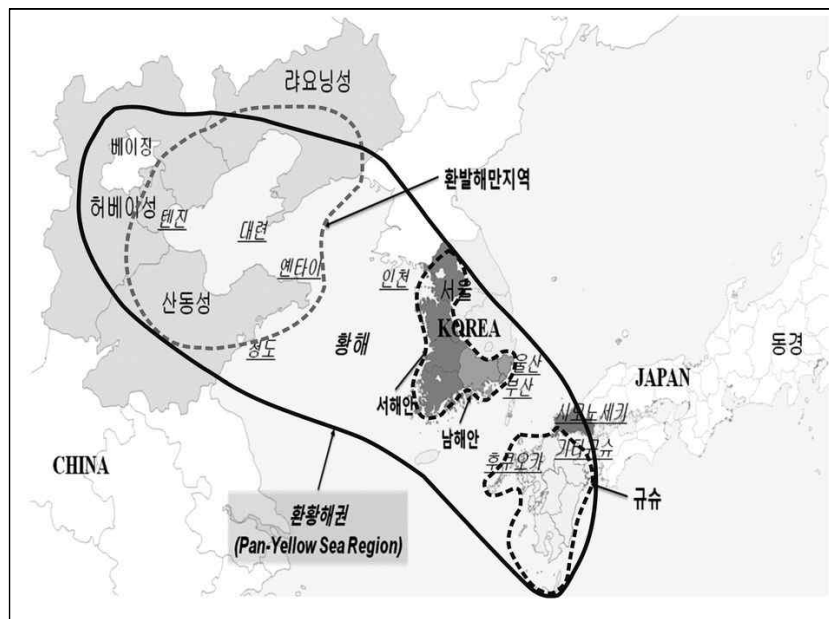
제2절 국제무대 지방외교의 부상

제3절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전환

제1절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1. 환황해권의 범위

- OECD(2010)에서는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로 중국북부 해안지역(환발해만), 일본 서남 해안지역(큐슈), 한국의 남해안과 서해안지역을 포괄하는 협의의 환황해권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텐진, 일본(후쿠오카현), 한국(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 경상남도, 부산, 울산)



[그림 2-1] 환황해권의 범위

자료: OECD, 2010. 환황해권 초국경도시권 협력.

- 국토해양부(2011)에서는 한국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일부), 중국 저장성 이북 동부연안지역(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수성, 저장성, 베이징시, 텐진시, 상하이시), 일본 큐슈를 포함하는 광의의 환황해권과 한국의 서해안권, 중국의 상하이 이북 동부연안지역(환발해만권), 일본의 큐슈(일부)를 포함하는 협의의 환황해권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의의 개념을 사용.¹⁾

1) 환황해권과 혼용되는 ‘환황해경제권’은 공간적 개념이라기 보다 황해주변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지자체간 경제교류지역을 의미함. 다만, 3국이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협약을 맺거나 경제협력 또는 통합권역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경제권이 형성된 것은 아님(국토해양부, 2011. 새만금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p.7).

- 향후 환황해권 정책추진을 위해 협의의 환황해권과 광의의 환황해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국토해양부(2011)의 안 중 광의의 환황해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²⁾
 - 협의의 환황해권 : 중국의 환발해권(허베이성, 랴오닝성, 산둥성, 베이징, 텐진), 한국의 서해안(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일본의 규슈(후쿠오카), 북한의 서해안(황해도, 평안도)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규정
 - 광의의 환황해권 : 협의의 환황해권에 더해 중국의 장수성, 저장성, 상하이시, 한국의 경상남도, 일본의 규슈 전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규정.

〈표 2-1〉 기존연구에서의 환황해권의 범역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중 국	일 본
이강선(1997)		충남, 인천, 경기, 전북, 전남, 제주	평양, 남포, 개성,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텐진, 상하이, 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수, 저장	구마모토,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강용기 (2005)	협의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평양, 남포, 평북, 평남, 황북, 황남	베이징, 텐진, 상하이, 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수	-
	광의	협의+부산, 경남	평양, 남포,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협의+헤이룽장, 지린, 저장	규슈전역
경기개발연구원 (2008)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랴오닝, 허베이, 텐진, 산둥, 장수, 상하이, 저장	-
OECD(2010)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경남, 부산, 울산	-	산둥, 허베이, 랴오닝, 텐진	후쿠오카
국토해양부 (2011)	협의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허베이, 랴오닝, 산둥, 베이징, 텐진	후쿠오카
	광의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허베이, 랴오닝, 산둥, 베이징, 텐진, 장수, 저장, 상하이 ³⁾	구마모토,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본 보고서에는 2016 충남도 환황해 미래전략연구에서 지정한 OECD기준의 지리적 범위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환황해권 범위를 정의함

2) 중국의 내륙과 홍콩, 대만, 아세안지역을 포함하는 초광역 환황해권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수 RCEP참가국가와 거의 경계를 같이하고 있어 따로 환황해권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임.

3) 상하이는 그 영향력이 주변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황해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OECD, 2010:24).



[그림 2-2] 본 연구에서의 환황해권 범위

2.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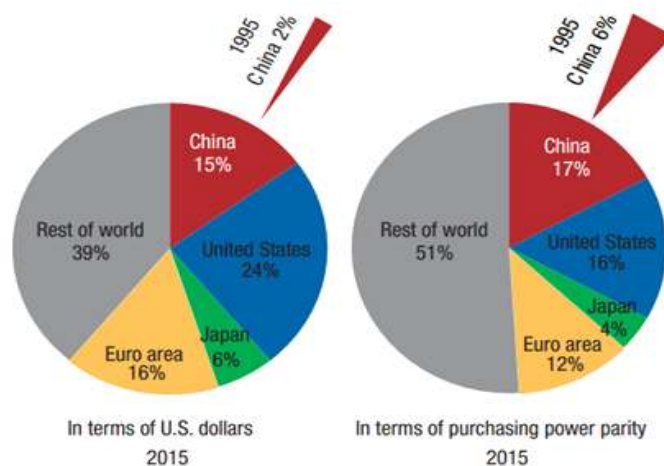
- ‘환황해권 시대’ 도래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한·중·일 등 환황해 인접 국가들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 ② 환황해권 역내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 ③ 글로벌 경제의 소비지로서 환황해권의 부상

■ 환황해권 국가들의 교류역사

- 환황해권은 오래전부터 한중일 3국간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의 요충지로 해안 무역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는 중국은 당나라, 한국은 신라시대, 일본은 야마토, 나라, 헤이안시대였음.
- 환황해권의 무역중심지는 중국의 라오닝성과 산둥성,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일본의 큐슈지방으로 지역통합이 바닷길을 통해 활발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기도 하였음.
- 환황해권 지역통합을 견인한 것은 시장경제(다국적기업)와 지방분권화, 지리적 근접성임(OECD, 2010:29-30).

■ 환황해권 국가들의 경제성장

- 환황해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인구 및 GDP비중은 높은 편임
 - 환황해권 면적은 세계의 0.5%, 한중일 3국의 8.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세계의 6.3%, 한중일 3국의 26.8%, GDP도 세계의 4%, 한중일 3국의 29.4%를 점유하고 있음(국토해양부, 2011;23).
- 이는 한중일의 경제활동, 자본 및 인력이 환황해권에 집적되어 있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성장과 함께 환황해권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Source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nd IMF staff calculations.

[그림 2-3] 환황해권 국가들의 세계 GDP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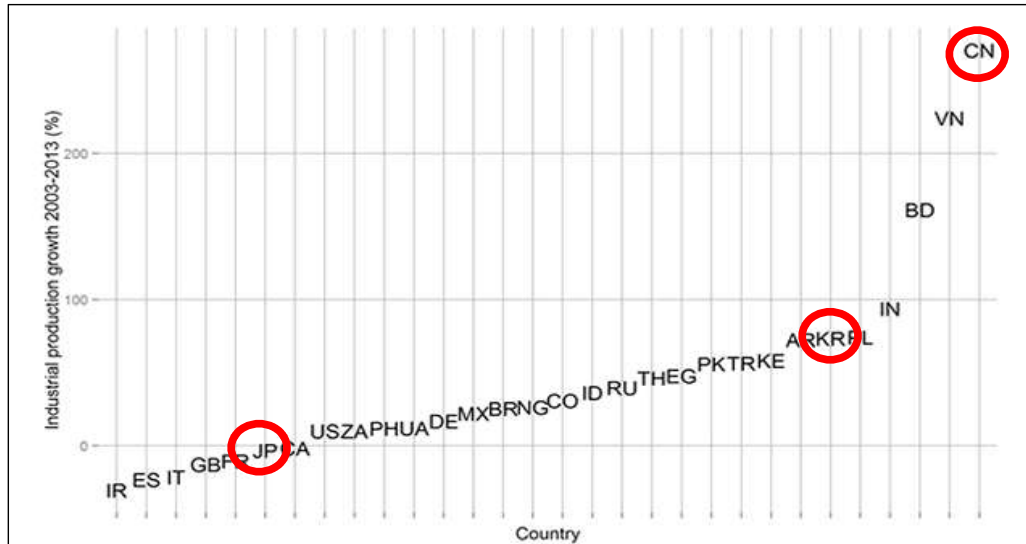
〈표 2-2〉 환황해권지역의 경제규모

구 분	면적(km ²)	인구(100만)	GDP(조원)
세계	148, 430,000	6,437	89,996.5
중국(2009)	9,506,930	1,335	5,763.3
동해연안지역	742,330	386	2,699.6
일본(2008)	377,835	127.3	5,563.3
큐슈	42,163	13.2	533.4
한국(2008)	99,646	49.8	979.5
서해안권	12,641	6.2	382.5
한국+중국+일본	9,984,411	1,512.1	12,306.1
환황해권(%)	797,134 (8.0)	405.4 (26.8*)	3,615.5 (29.4)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새만금 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한중일)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p.24에서 재인용.

■ 환황해권 역내 교역의 증가

- 환황해권 국가인 한·중·일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 (1983, GDP)에서 20.8%(2013, GDP)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국가별로는 중국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⁴⁾(2%, 1983 → 12.2%, 2013)



[그림 2-4] 국가 간 산업생산 성장률 비교(2003-2013)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http://www.eiu.com/>)

- 환황해권 국가 간 역내 무역의 비중은 14.2%(1992)에서 19.6%(2013)로 급성장하여 글로벌 무역의 주요 권역으로 부상함⁵⁾. 동기간내 3국의 전 세계 교역액은 652% 성장하였으며, 3국간 교역량은 937.2% 증가함.
- 국가별로는 중국의 교역액 증가율은 1,808.2%, 일본 586.1%, 한국 764.5%에 달함

■ 환황해권이 세계 소비지로서 부상

-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세계의 소비지가 과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으로, 중국이 세계의 소비지로서 글로벌 경제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단, 이는 전통적 소비지인 미국이나 유럽을 대체한 다기보다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함.

4) GDP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1983년 기준 전 세계 GDP 11조 6,002억 달러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일본 10.5%, 한국 0.8%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전 세계 GDP 75조 6,218억 달러 중 중국이 12.2%, 일본 6.5%, 한국 1.7%에 달함.(World bank).

5) 한중일 3국의 전 세계 교역액은 1992년 기준 8,950억 달러였으며, 그 중 3국간 교역액은 127억 달러로 그 비중은 14.2%를 차지함. 2013년 기준으로 6조 7,300억 달러 중 3국간 교역액은 1,319억 달러로 그 비중은 19.6%에 달함(UNcomtrade).

- 전세계 수입중 중국의 수입은 2001년 3.9%에서 2014년 13.4%로 증가함.⁶⁾
- 결국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는 핵심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과 그 역할이 세계의 생산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전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한 이해]

- 우리는 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해 생산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음. 가령 세계 경제의 성장이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생산과잉이 만연한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줄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은 대다수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로서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따라서 미국은 그 거대한 소비력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결정적 공헌을 했음
 - 특히 미국은 소비력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혁신활동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것이 바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음
 - 중국이 향후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이 생산기지로써뿐 아니라, 기존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대한 중산층과 정부가 성장한 소비력을 통해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음
-
- 중국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중국의 연해지역이 주도했으며, 이들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임. 한국 또한 동남권 주력산업이 둔화하는 가운데, 서해안권 지자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특히 충남은 이러한 발전축의 이동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지자체임.
 - 일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 권역에 이은 제2의 경제권역으로서 기타큐슈에서 자동차부품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 중임.

6) 2001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 6조 2,696억 달러 중 중국 수입은 2,435억 달러로 그 비중은 3.9%였으나, 2014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 14조 6,433억 달러 중 중국 수입은 1조 9,580억 달러로 그 비중은 13.4%로 동기간내 134%의 성장률을 보임.(UNcomtrade)

3.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주도성 확보

■ 한중일 3국은 근대화 과정상 상이한 단계에 있음

- 한중일 3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각자 다른 발전단계에 있음
 - 일본은 가장 먼저 근대화 과정에 돌입하였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사실상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본격적인 서구식 근대화에 착수함
 - 각 국의 지방정부 간에도 근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속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능동적 역할이 존재
 - 한국은 근대화를 대표하는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처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연계를 통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

■ 충남은 환경과 개발의 극심한 접점에 위치

-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보전과 개발 간의 대립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충남임
 - 충남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의 하나인 서울 수도권에 인접하여 환경과 개발의 움직임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음
 - 하천연안생태계로 구성된 충남의 생태계는 개발에 민감한 생태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항만 입지에 유리한 해안을 갖고 있으므로 개발압력이 극심
- 충남의 경험과 극복 노력은 세계적인 의의를 지님
 - 충남에서 벌어진 환경과 개발의 충돌은 모든 국가의 지방정부에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특히 최근 충남의 환경복원 노력은 그 의의가 큼
 - 충남의 경험과 정책 콘텐츠는 모든 지방정부의 노력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큼

■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충남의 지리적 위치

- 충남은 환황해권의 서쪽 해안의 지리적 중심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구성원임
 - 환황해권에서 충남은 북쪽으로는 경기도, 인천, 황해도를 두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전라도와 접하고 있음. 또한 서해바다 건너 중국의 산둥성과 마주보고 있음
 - 이러한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충남이 환황해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제2절 국제무대 지방외교의 부상

1. 지방외교의 정의와 범위

- 일반적으로 외교란 국가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서 국가의 전속적 관할사항으로 보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음⁷⁾.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
 -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⁸⁾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헌법과 법령을 통해 위임된 범위 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범위 내에서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외합의서의 체결만이 허용되며, 주로 외국의 관계기관과 체결하는 합의 문서를 기초로 수행되고 있음.
- 최근의 지방자치제의 심화와 지방분권화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외교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지역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외교영역의 설정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지방외교는 중앙정부의 외교에 대비하여 지방공공부문이 수행하는 대외활동을 의미함.
 - 중앙정부의 외교는 국민 안전과 국가 주권의 보호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외교는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또는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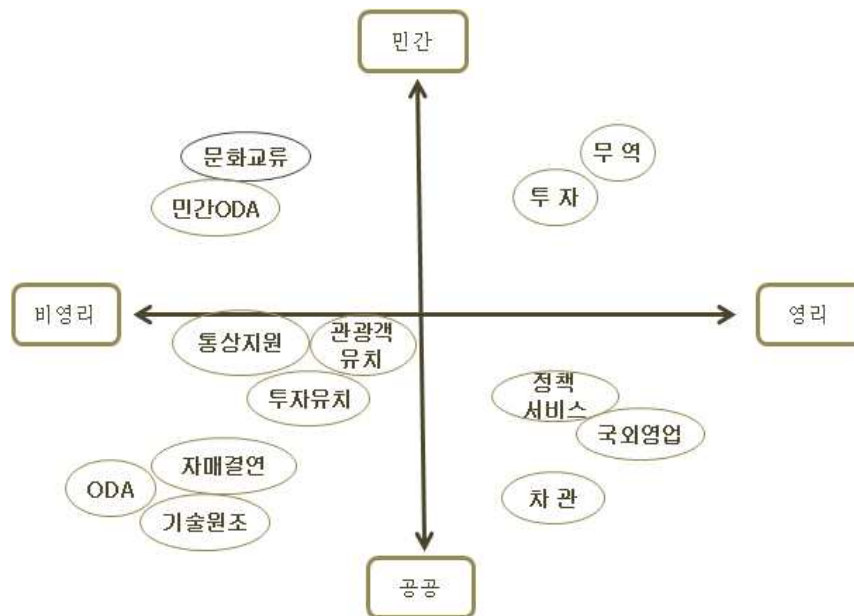
■ 외교주체의 다원화, 외교방식의 다양화

- 과거 중앙정부 권한의 외교는 오늘날 외교주체의 다원화와 외교영역의 다양화로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일반시민까지 외교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
 -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방정부, 시민단체(NGO), 시민이 국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7) 우리나라 헌법은 외교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대통령) 소관으로 명시하고 있음(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8) 정부조직법 제30조 1항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제28조 문화외교국에 관한 규정 중 국장 사무분장 9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중 차관을 보좌하는 기획조정실장사무로서 29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을 포함

- 외교 방식에서는 비영리적 성격의 공공부문 국제협력 사업이 영리적 방식으로도 강조되고 있음.
- 과거 무상원조로 대표되던 ODA는 유상차관, 기술거래 등 유상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동인은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음



[그림 2-5] 공공외교의 범위

■ 외교의 내용은 친선, 교류협력, 통상(지원), 국제화로 대별

- 외교주체의 다원화, 외교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지방공공외교의 내용은 크게 친선·교류협력, 통상지원, 국제화, 남북교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친선] 은 지방정부간 서로를 이해하고 불신과 의혹(생경함)을 해소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외교형태
- [교류협력] 은 공통의 관심사 또는 목표를 위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거나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임
- [통상지원] 민간의 통상활동을 촉진 지원하거나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통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
- [국제화] ‘내향적 외교’로서 주민의 국제화 수준 함양,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시책 등을 포함

2. 지방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 냉전해체에 따라 글로벌 의제를 둘러싸고 지방이 국제무대 등장

- 냉전시기 진영 논리 지배로 인해 지방정부는 설 자리가 없었음
 - 냉전 시기에는 진영논리에 따라 국제정치가 좌우되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국가 단위의 외교도 종속적 지위에 머무름
 - 이 시기 지방 정부의 외교는 주로 동일 진영 내부에서의 ‘원조’ 성격을 띠
 - 구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인해 진영 논리가 와해되어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글로벌 의제를 매개로 지방의 역할이 국제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함
 - 이 시기 지구온난화, 빈곤 타파 등 글로벌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글로벌 이슈의 지역적 실천”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음
 -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의제 21』 등은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의 관여를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임

‘리우 회의(Rio Summit)’ 소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회의로, 178개국 정부 대표 8,000여 명과 167개국의 7,892개 민간단체 대표 1만여 명, 취재기자 6,000여 명, 대통령·수상 등 국가정상급 인사 115명 등이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임. 주요행사로는 각국 의원이 참가한 '의원 대회', 도시환경문제를 의논한 '세계도시회의', 그리고 '국제환경기술박람회', '국제환경언론가대회', '열대식물환경조사회의' 등이 개최되었음.

‘지방의제 21’ 소개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임.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음.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 행동계획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역차원의 행동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의제21 제28에 근거함.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차원의 계획인 의제21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임

■ 전반적으로 지방외교는 원조외교 → 통상외교 → 정책외교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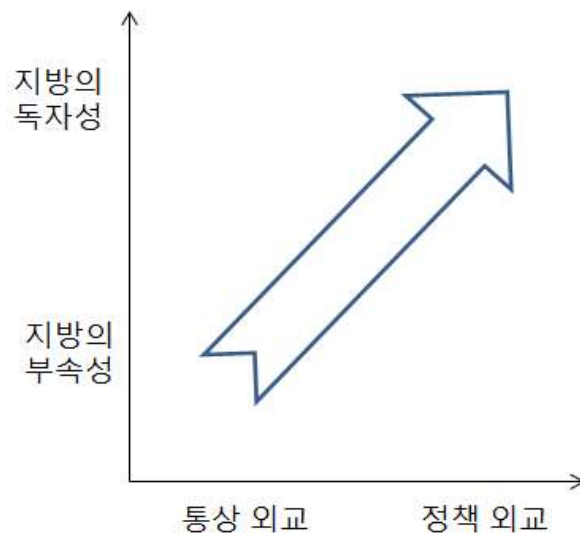
- 원조 외교는 1990년 대 들어서 국제외교에서 시들해지기 시작했으나 민간의 중요한 국제활동 영역으로 계승되고 있음
 - 진영 외교 시기에는 진영 확보를 위한 원조 외교가 국제외교의 중요한 방식이었으나, 진영 외교의 붕괴로 그 필요성이 약화됨
 - 그러나 민간이나 NGO 가 정부차원의 원조를 급속히 대체하면서 원조 외교는 여전히 중요한 국제외교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 1990년대 풍미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에 집중화 됨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수요, 체제 전환국의 자본 수요, 지방정부의 정책수요 등이 중첩되면서 외국인투자유치가 경제성장의 촉진책으로서 광범하게 채택됨
 - 학술적으로 장소 마케팅이 유행함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가 풍미함
 - 이 시기 지방차원의 외교는 이러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상외교가 주축을 이룸
- 2000년 이후 소프트 파워의 중시에 따라 정책외교가 대두됨
 -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외교가 일상화됨에 따라 각 나라와 지방정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 통상에서 문화, 예술 등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경향이 형성됨
 - 특히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외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하기 시작
 -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원조, 통상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에 정책을 컨설팅하고 이와 결합된 해외시장진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화

■ 지방외교가 국익 대변에서 독자적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 과거에는 지방외교를 국가외교의 보완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음
 - 1990년대 이전에는 진영논리의 영향에 따라 지방외교를 국익을 실현하는 국가외교의 종속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음
 -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지역 단위(특히 도시 단위)의 참여가 빈번해지면서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글로벌화 심화를 배경으로 지방의 독자성 강하게 투영

- 그러나 글로벌화의 영향, 특히 FTA 체결 등 국가의 보호막 역할이 약화되면서,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직접 외국 자본과 직접 교섭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이는 국가가 글로벌화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 직접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내부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여 '지역'의 강화가 대안으로서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큼
- 특히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방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주장하고 있음



[그림 2-6] 지방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제3절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전환

1.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의 전환

- 과거 1960-90년대 단기간에 이룬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로서 한국의 위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코리안드림(Korean Dream)’으로 형성됨
-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변화하여,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되었음.
 - 1991년 정부는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고 해외개발원조의 기초를 닦았음. 1996년 OECD가입을 전후하여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하였고, 2004년 KDI는 개도국에게 개발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KDI School 개설·운영 시작
- 정부 공기업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경제개발경험에 근거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전개하기 시작함
 - 한국전력, 한국원자력수자원공사, 한국광업공사 등의 해외진출
- 중앙정부차원에서 2004년 한국개발연구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개발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시작함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소개

지식이 개발협력의 주요 구성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G20 다년도 액션플랜에서 밝혔듯이, 개발경험을 나누는 것은 효과적인 개발 솔루션의 수용과 적용에 많은 기여를 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전쟁에 찢겨진 나라에서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로 변모한 지금, 한국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배웠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지식 공유야말로 경제개발을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도구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지식공유프로그램 즉 KSP를 시작하였고, 이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ksp는 한국의 개발노하우를 공유하여, 파트너 국가를 돕고 지식격차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처: KSP홈페이지)

2. 지방정부의 외교 드라이브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광역지자체장 민선을 기점으로 2000년 이후부터 지방외교의 가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 국제기구 유치 측면에서, 2005년 포항시가 NEAR⁹⁾사무국 유치, 2012년 인천시의 GCF¹⁰⁾사무국 유치, 2014년 서울시 MITI¹¹⁾연수 유치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 수출 측면에서, 2012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외시장 진출, 2014년 인천시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CEO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임

제4절 충남 외교의 현황

1.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

- 지방공공외교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광역지자체장의 민선을 기점으로 함

■ 통상 외교중심

- 1994년 7월, 광역 시도 공동출연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설립과 1995년 1월 민관공동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됨
- 또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고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수립과 추진방침을 제시함
 - 내무부 훈령에 의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이 대표적이며, 지방공공외교의 대표적 형식인 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의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1998년 9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충남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업무가 지방외교의 핵심활동으로 자리 잡게 됨

9)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10) GreenClimateFund, 녹색기후기금

11)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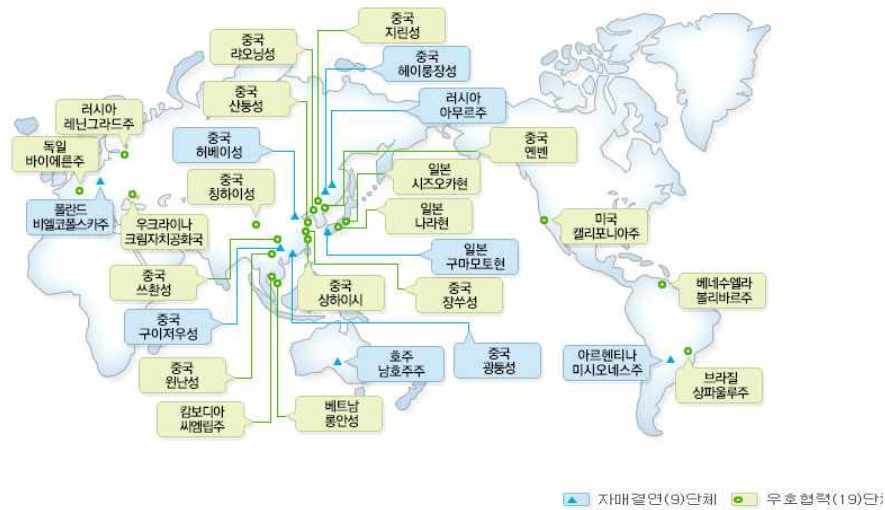
■ 통상실(과) 주무부서 중심

〈표 2-3〉 충청남도 국제교류 관련 조직의 변천

연도	전담부서	업무분장	인력 (정원)	주요 특징
1994.5	국제통상협력실 (2계)	· 국제협력계 · 국제통상계	11명	· 부지사직속 독립부서, 일반교류 통상 업무 종합처리
1996.2	국제협력담당 관실 (2계)	· 국제교류계 · 국제지원계	13명	· 기획관리실 산하로 조직변경, 통상업무는 중소기업과로 분리
1997.2	국제협력관실 (3계)	· 국제기획계 · 교류1계 · 교류2계	17명	· 명칭변경 · 충남뉴욕사무소개소 · 98.1월4개계로확대(국제계획계,아주계,미주계,구주계)
1998.9	국제통상과 (5담당)	· 국제기획담당 · 통상협력담당 · 아주담당 · 미주담당 · 구주담당	26명	· 경제통상국산하로조직변경,일반교류통상업무통합 · 충남구마모토사무고개소
1999.9	국제통상과 (5담당)	· 국제기획담당 · 국제교류담당 · 통상진흥담당 · 투자유치담당 · 외자유치담당	30명	· 국제부서일원화(일반교류축소,투자외자흡수) · 충남 상하이 상품전시관 개관 · 2000.8월외자유치담당을투자유치담당으로 흡수통합 · 2003.1월 통상진흥,투자유치담당 → 통상진흥팀,투자유치팀으로변경 · 2004.1월중국지원팀신설
2007.1	국제통상과 (4담당)	· 국제기획담당 · 국제교류담당 · 통상진흥담당 · 중국지원담당	25명	· 투자유치담당을투자유치담당관실로분리 · 2007.9월 국제교류담당에서 일본T/F팀 분리운영 · 2008.1월 일본담당신설로 5담당 26명 · 2008.1월 뉴욕무역관을 이전하여 LA통상사무소설치
2008.7	국제통상과 (5담당)	· 국제기획담당 · 수출지원담당 · 농수산물수출담 당 · 국제교류담당 · 중일교류담당	29명	· 농수산물수출담당신설 · 구미→국제교류(명칭변경),중국+ 일본→중일교류
2009.7	투자통상실 (1담당관2과)	· 국제협력과 · 투자유치담당관 · 통상지원과	55명	· 투자통상실신설 · 수출지원+농수산물수출→통상지 원과분리
2010.10	국제통상과 (3담당)	· 국제교류 1 · 국제교류2 · 통상지원	33명	· 투자통상실과경제산업국을경제통상실로통합 · 국제교류2는중국일본담당
2016현재	기업통상교류과 (6담당)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통상지원 · 구미주 담당 · 중화권 담당 · 아주 담당	33명	·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에서 기업 및 통상지원과 국제교류 권역별 담당으로 분리 · 영어권 구미주 담당, 중국/몽골 중화권 담당, 일본 및 서남아대양주 아주 담당

■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교류집중

- 충청도는 2017년 기준 13개국 28개 도시와 우호교류 및 자매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나, 실제 교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와의 교류 중심임



[그림 2-7] 충남도 국제교류현황

출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기업통상교류 - 국제교류사업 현황

<표 2-4> 충남도 해외 자매교류(9) 및 우호교류(19) 현황(2017.10)

국가명	도시명	결연일자	비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State of Bolivar/)	1997-03-25	우호교류
브라질	상파울루주(state of Sao Paulo/)	2009-04-06	우호교류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County of Misiones/)	2001-05-28	자매교류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1999-10-12	자매교류
미국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	1997-03-20	우호교류
베트남	롱안성(Long An Province/)	2005-06-09	우호교류
일본	구마모토현(Kumamoto Prefecture/)	1983-01-22	자매교류
	나라현(Nara Prefecture/)	2011-10-26	우호교류
	시즈오카현(Shizuoka Prefecture/)	2013-04-30	우호교류
	구이저우성(Guizhou Province/)	2016-11-22	자매교류
중국	랴오닝성(Liaoning Province/)	2010-11-03	우호교류
	산둥성(Shandong Province/)	1995-10-31	우호교류
	상하이시(Shanghai City/)	2008-11-03	우호교류
	쓰촨성(Sichuan Province/)	2008-09-05	우호교류
	옌볜조선족자치주(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2002-04-16	우호교류
	윈난성(Yunnan Province/)	2013-06-07	우호교류
	장수성(Jiangsu Province/)	2005-09-27	우호교류
	지린성(Jilin Province/)	2005-09-26	우호교류
	칭하이성(Qinghai Province/)	2014-09-01	우호교류
	허베이성(Hebei Province/)	1994-10-19	자매교류
	헤이룽장성(Heilongjiang Province)	2015-01-28	자매교류
	광둥성(Guangdong Province)	2016-06-27	자매교류
캄보디아	씨엠립시(Siem Reap Province/)	2008-06-18	우호교류
독일	바이에른주(Bayern Province/)	1999-05-11	우호교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Saint Petersburg/)	2000-12-13	우호교류
	아무르주(Amur/)	1995-06-15	자매교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2012-09-16	우호교류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Wielkopolska/)	2002-04-26	자매교류

2. 충남외교의 두 축: 일상적 통상외교와 포럼외교

■ 충남 외교는 통상외교와 포럼외교가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음

- 충남도의 통상외교는 기업통상교류과가 수행하고 있음
 -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국제교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충남도 국제교류의 주무부서임
 - 전반적으로 통상중심의 업무체제임
- 통상적 국제교류와는 별도로 포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포럼 외교가 활발함
 - 2015년을 시발로 하여 환황해포럼, 한중일3농포럼, 수소에너지국제포럼, 탈석탄국제포럼 등 포럼을 통한 공공외교가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형성됨
 - 단, 이러한 포럼이 글로벌화 전략에 의한 수행보다는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환황해포럼은 충남의 주도성을 구현한 사례에 속함

- 환황해포럼은 ‘환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가 침체한 상황에서 충남이 시작한 포럼으로서 충남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성을 발휘한 사례임
 - ‘환황해권도지사협의회’는 2000년대 초반에 모임을 가졌으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었음
 - 이러한 활동 공백 상황에서 충남이 환황해포럼을 시작한 것은 대담한 시도임
 - 한중일3농포럼, 수소에너지국제포럼, 탈석탄국제포럼 등 특정주제별 포럼과 달리 환황해포럼은 종합 포럼으로서 그 위상이 현저히 다름

3. 충남 외교 전략의 부재

■ 충남은 외교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음

- 1995년 지자체부활 이래 지금까지 충남은 충남의 외교전략 혹은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음
 - 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대부분 필요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도 차원에서 외교 전략을 수립한 적은 없음

■ 환황해포럼을 계기로 외교전략 부재의 문제가 드러남

- 2015년 환황해포럼 개최는 충남이 외교 전략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
 - 환황해포럼과 같은 거대한 실천은 이를 뒷받침할 비전과 전략을 세울 것을 요구함
 - 환황해포럼 개최를 기폭제로 하여 충남의 외교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 다양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음

제5절 충남 지방외교 문제점

1. 글로벌 위상과 외교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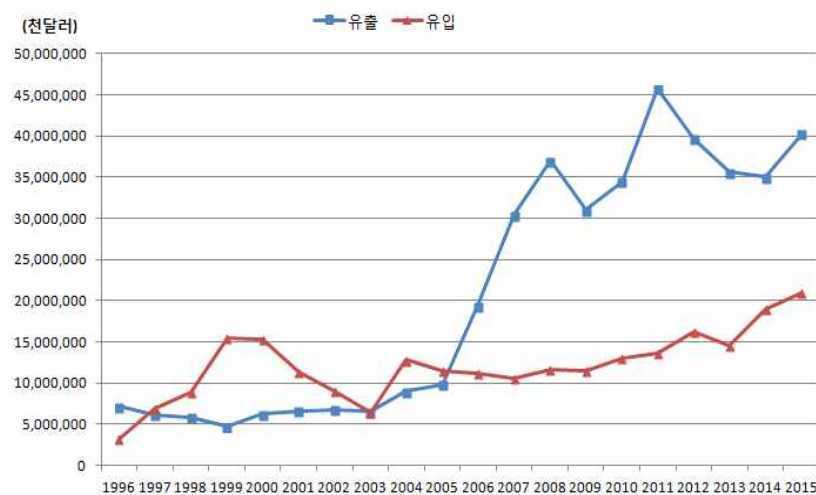
■ 충남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대표적인 신공업지역으로 자리잡음

- 1995년을 기점으로 충남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였음
 - 사양산업의 재입지가 아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지로 인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
 - 이에 따라 충남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공업지역으로 자리잡음
- 현재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규모는 과거에 비할 바 없이 고도화되었음
 - 충남의 산업구조는 글로벌 추세나 국가의 추세와 달리 제조업 편중의 경제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충남은 제조업의 고도화,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과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충남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제3위를 기록하는 등 타 국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롤모델로 인식되고 있음
- 충남이 현재 안고 있는 지역 이슈와 정책은 세계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공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지역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
 - 특히 농업과 공업, 환경과 개발 등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타 지방정부에게 반면교사 또는 모범사례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충남의 외교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음

- 글로벌 외교, 중앙정부의 외교는 소프트파워 외교로 전환했으나 충남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위한 외교에 머물러 있음
 - 글로벌 외교는 경제성장, 개발 등을 위해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 통상외교에 집중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문화, 예술, 정책 등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외교로 전환하였음
 - 공공 외교에서도 지방정부의 정책을 중심 화두로 하는 정책 외교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해외자본의 유입보다 자본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중심의 외교는 적실성이 떨어짐
 -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본 유입보다 자본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본 수출국으로 전환함
 - 한편 자본과 관광객 유치는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정책으로 정착됨
 - 따라서 자본 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외교는 충남의 외교 전략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되고 있음



[그림 2-8]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국제무대에서 충남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 충남의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력 사업은 전국 15개 시도 중 최하위권임
 - 충남의 국제기구 가입은 2개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을 형성
 - 충남은 독자적 국제협력사업은 없으며, ODA역시 KOICA에 맡기는 수준임

〈표 2-4〉 시도 가입 및 활동 국제기구/국제회의 현황(2014기준)

사도	국제기구/국제회의	사도	국제기구/국제회의
서울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인간정주관리위원회(CITYNET) •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ANMC 21)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C40기후리더십그룹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 세계전자정부협의체(WeGO) • 아·태관광협회(PATA) • 세계관광도시연합회(WTCF) • 세계협회연합(UIA) • UNESCO창의도시네트워크 •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GDCO) • 미주여행업협회(ASTA) 	부산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OEAED)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 • 인간정주관리위원회지방정부망(CITYNET) • 세계도시서밋시장포럼(WCSMF)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세계올림픽도시연합(UMVO) • 국제전기통신개발회의(WTDC)
대구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 세계슬라시티총회 • 세계물위원회 	인천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 • 인간정주관리위원회지방정부망(CITYNET)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OEAED)
광주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세계빛도시연합(LUCI) •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 전미자매도시연합(SCI)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대전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국제지역벤처마케팅컨소시엄컨퍼런스 •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
울산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OEAED)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 세계관광기구(UNWTO)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세종 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OEAED)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동북아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GCONA) •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EATOF) • 아시아태평양연가차량협회(ANGVA) • 북구권포럼(NF) • GTI동북아지방협력위원회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제주 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NEAR) •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 • 한국-아랍소사이터티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도시환경협약 • 아·태관광협회(PATA) • 미주여행업협회(ASTA) •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 •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 		

2. 전략적 관점의 미약

■ 충남의 외교 전략은 사실상 없는 가운데 부서의 필요에 의해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 단위로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 바 없음
 - 사업 중심의 국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로 기업교류통상과 주도로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도 차원의 외교전략은 수립된 바 없고, 환황해포럼을 계기로 문제의식이 싹트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중장기 계획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글로벌 마인드” 장착 미흡

- 충남은 수출제조업을 매개로 국제생산네트워크에 깊숙이 편입된 현실에 비추어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에 있어서 “글로벌 마인드”는 취약한 상황임
 - 각종 중장기 계획에서 타국 지방정부와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부족
 - 충남의 입장을 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투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교류나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국제교류와 협력이 지속성에 의문

■ 그 결과 기존의 전략 수립은 전략과 실천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 초래

- 장기전략의 미비에 따라 외교 중점이 수장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현실은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성과축적에 한계를 지우고 있음
 - 또한 그러한 사업 추진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논의된 전략도 단계별 실천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경우가 많음
 - 전략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전략을 구현할 단계별 실천과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여 추진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폄하가 벌어지기도 함



제3장 글로벌화 전략 사례 검토

제1절 충남도 환황해 전략수립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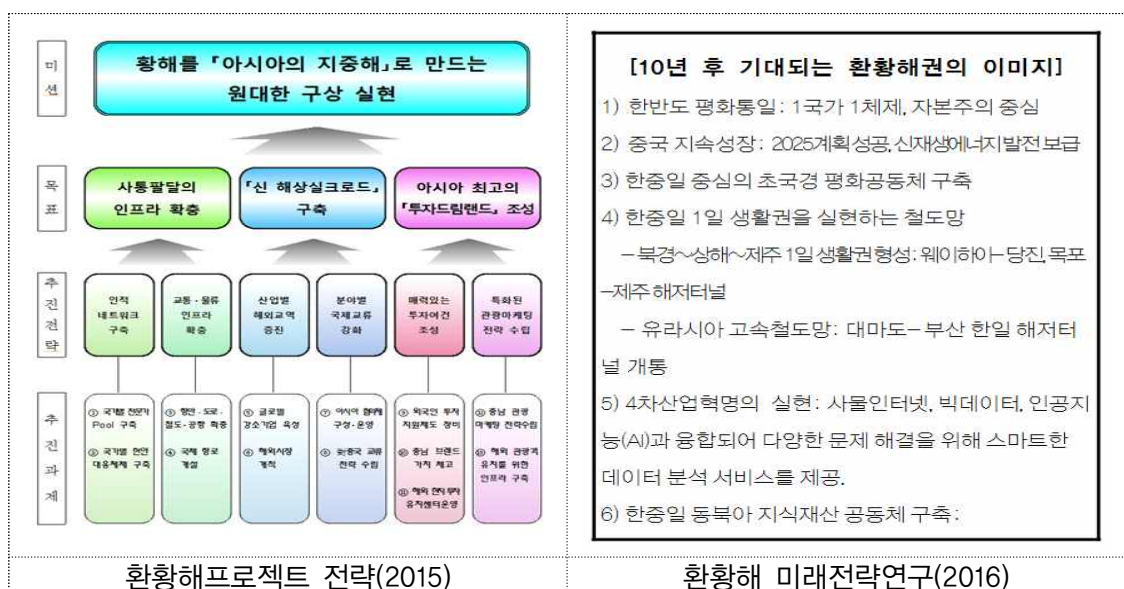
제2절 환황해 전략 관련 충남 중장기계획 검토

제3절 지방차원의 권역 교류·협력 사례

제1절 충남도 환황해 전략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 충남도는 2015년부터 환황해 전략을 모색해 왔음

- 자체적인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발굴, 환황해 미래전략 연구용역, 지방공공외교3.0 전략연구 등을 추진함
-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발굴은 도청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행
 - 2015년 『환황해포럼』의 시작을 계기로 2015~2016년 기간 도 정책기획관실 산하 환황해 TF팀이 설치·운영되면서 환황해 프로젝트가 추진됨
 - 이를 통해 ‘환황해 프로젝트 전략’을 도출하였음
- 2016년에는 KAIST가 수주하여 ‘환황해 미래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함
 - 환황해 프로젝트 전략을 미래전략의 시각에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함
 - KAIST가 용역을 수주하여 미래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공무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 2016년에 충남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지방공공외교3.0전략연구’를 수행
 - 지방외교 패러다임 전환의 시각에서 충남 외교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외교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충남지방외교의 전략화, 콘텐츠의 국제화, 충남의 세력화를 제시함
 - 핵심 사업전략으로서 충남 공공외교기본계획 수립, 충남정책의 연수프로그램화, 충남 주도의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결성을 제안



■ 기존 환황해권 전략 모색은 물리적 인프라 치중, 충남의 정체성 인식 미약, 단계적 실천전략의 미흡 등 한계를 보임

-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발굴이나 환황해 미래전략 연구용역으로부터 도출되는 전략은 대부분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함
 - 환황해 프로젝트 전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인프라, 투자유치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지역의 개발사업, 통상 정책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나 전반적으로 물리적 인프라 중심임.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 기존 전략 모색은 충남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미약함
 - 주로 외부 환경(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내부 요인(약점, 단점)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에 이에 따른 외교전략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그 결과로서 단계적 실천전략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보임
 - 물리적 인프라 치중, 충남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결과 제시한 전략을 추진할 실천전략이 애매하게 남겨져 있음

■ 일부 날카로운 통찰력과 관련 시사점이 제출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음

- ‘아시아협의회 구성·운영’은 논의의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
 - 환황해 프로젝트 전략을 실현하는 대외 조직적 기초로서 아시아협의회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실천전략의 수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
 - 특히 충남이 이러한 초국경협의회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공세적인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한중 해저터널’ 논의는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는 참신한 시각임
 - 충남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충남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라는 지리적 범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음
 - 또한 한중해저터널 논의는 충남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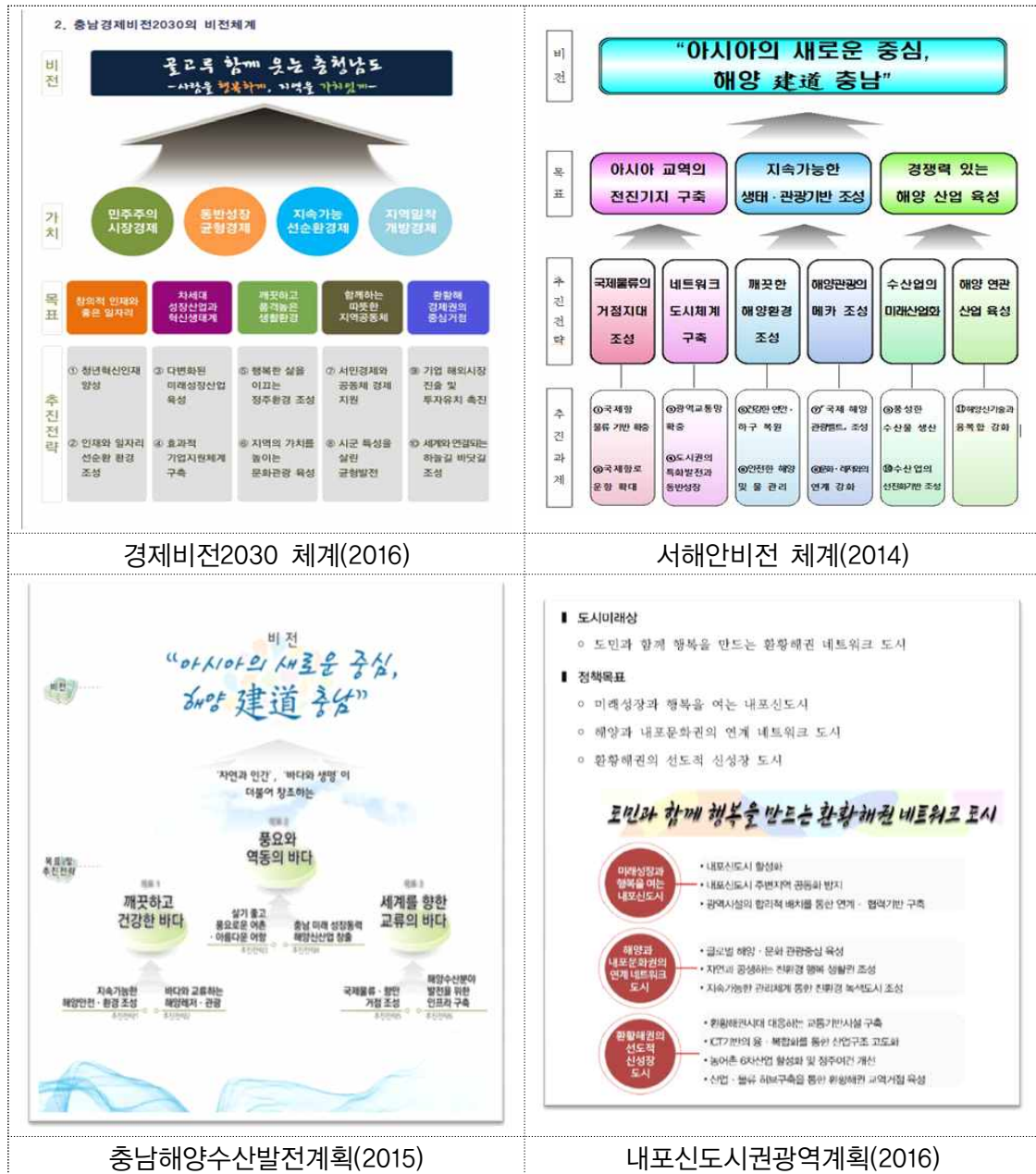
- ‘동북아 지식재산공동체’ 논의는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참신한 시각을 제공함
 - 동북아 지식재산공동체는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음
 - 지식재산공동체는 인프라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

제2절 환황해 전략 관련 충남의 중장기 계획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수립을 위해 충남의 주요 중장기 계획 내용을 분석검토함

- 『충남경제비전2030』 (2016),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2015), 『서해안비전』 (2014), 『내포신도시광역도시계획』 (2015) 등을 검토함
 - 이들 계획은 그 연구 대상의 지리적, 시간적 범위가 충남의 환황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충남의 내포권이 환황해 전략의 지리적 거점임을 고려하여 상기 계획들을 검토함
- 『충남경제비전2030』은 충남경제의 종합계획으로서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촉진,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바닷길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으로는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이동철새 및 갯벌관광허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K뷰티 테마파크, 창업 및 중소기업 아시아시장 개척지원,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 등 제시
- 『서해안비전』은 ‘해양건도 충남’을 기치로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국제물류의 거점 지대 조성,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과제로는 국제항 물류기반 확충, 국제항로 운항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권의 특화발전과 동반성장 등 제시하였음
-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은 ‘해양건도 충남’의 가치를 이어받아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를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국제물류·항만 거점 조성, 항만수산분야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과제로는 북극렬비도 어업전지기지 개발,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관광사업 교통망 확충 등 제시
- 『내포신도시광역도시계획』은 ‘환황해권의 선도적 신성장 도시’를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환황해권의 선도적 신성장 도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환황해권 시대 대응 교통기반시설 구축, ICT 기반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농어촌 6차산업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산업·물류 허브구축을 통한 환황해권 교역거점 육성을 제시하고 있음



〈표 3-1〉 충남 주요중장기 계획 사업 검토

구분	교류 네트워크 사업	인프라개발 사업	교류협력사업
경제비전 20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 동아시아 이동철새 및 갯벌관광허브 조성사업 - 아산만권 아시아투자산업지역 조성 -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조성 - K뷰티 테마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중소기업 아시 아시장 개척지원 - 대북교류협력 시범사업 추진 -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
서해안비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항만 개발 - 북격렬비도 어업전진기지 개발 -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 -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 관광·산업 교통망 확충 	-
내포 광역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 중심 육성 - 환황해권시대 대응 교통기반시설구축 - 산업물류허브 구축을 통한 환황해권 교역 거 점 육성 - 국제적 수준의 MICE산업 육성 및 항만시설 복합화 - 서산민항기 취항 - 환황해경제권 산업물류허브 구축 - 중국진출 교두보 인프라 구축 	-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의 시각에서 보면 충남의 주요 중장기 계획들은 인프라 개발 중심, 교류 네트워크 전략 부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충남경제비전2030』,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서해안비전』,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모두 인프라 개발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반계획은 항만, 도로, 공항, 산업단지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음
 - 『충남경제비전2030』에서 대외 교류협력사업 분야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타 중장기계획에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음
- 주요 중장기 계획들은 국제 교류네트워크에 대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4대 계획 모두 국제 교류네트워크를 독립된 실천전략 또는 과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특히 대외 협력이 필수적인 문명교류길(경제비전 2030), 크루즈항만 개발(서해안 비전), 서산민항기 유치, 중국진출 교두보 구축(내포광역계획) 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실천전략이 생략된 채로 제시되고 있음

■ 기존 주요 중장기 계획은 충남의 글로벌 위상, 국제 공통의 이해관계, 단계별 실천전략 등 측면에서 미흡한 한계를 보임

- 첫째, 충남의 현황이나 글로벌 위상 변화에 천착하고 있지 않음
 - 앞서 검토한 ‘환황해 프로젝트 전략’ 과 마찬가지로 충남의 현황에 대한 언급 특히 글로벌 위상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각 계획에서 충남의 현황에 대해서는 SWOT 분석을 수행했으나, 충남의 글로벌 위상이라는 추상수준에서의 검토 보다는 산업, 정주여건 등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충남의 일방적 이해관계가 투영, 국제 공통의 이해 고려 적음
 - 각종 중장기 계획이 제시하는 전략들 중 상당수는 국제 협력 또는 외국의 파트너의 협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전략들이 많음
 - 그러나 제시된 전략들은 파트너의 협력에 대한 고려가 없음. 가령, 핵심 파트너가 누구인지, 파트너가 추진 전략에 참여할 동기가 있는지,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고려가 보이지 않음
- 제시된 전략은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할 단계별 실천과제가 모호한 채로 있음
 - 인프라 개발 중심의 전략은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특히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은 정부의 협조나 민간의 호응이 없이는 수행 불가능함
 -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을 뒷받침할 단계별 계획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제시된 전략들의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전략 자체가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고 있음

■ 주요 중장기 계획들은 ‘국제 파트너십’ 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인해 제시된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을 정리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음

- 충남의 글로벌화 전략은 충남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만 성공할 수 있음
 - 충남의 글로벌 위상을 명확히 해야만 충남이 향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으며, 충남이 어느 지역과 무슨 콘텐츠를 핵심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이러한 글로벌 위상은 충남이 1950년대 이후 걸어온 변천과정과 글로벌 위상의 변화를 파악할 때에만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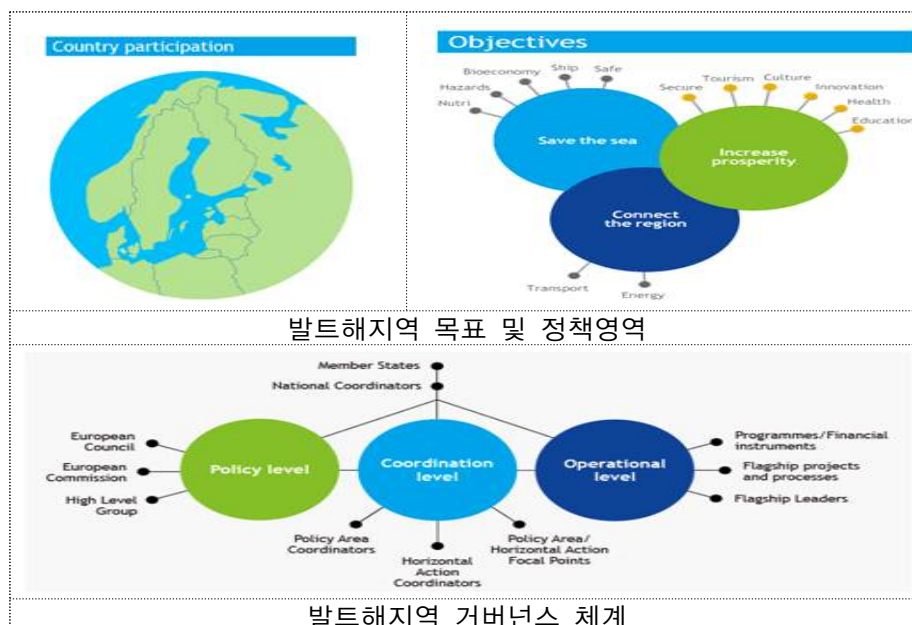
- 주요 중장기 계획들은 충남의 글로벌 위상에 고려가 미흡하여 이를 기초로 한 대외 전략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 주요 중장기 계획들은 글로벌화 전략 수립의 전제인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충남이 국제사회에서 압도적인 경제규모,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의 전략을 대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따라서 충남의 글로벌화 전략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서 국제 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고려와 강조는 필수적임
 - 주요 중장기 계획들이 제시하는 전략들은 대부분 충남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투영하는 방식으로서 그 실천 가능성이 의문임
- 따라서 주요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대외 전략을 정리하여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 방법이 아님
 - 주요 중장기 계획들의 대외 실천전략이나 과제는 충남의 글로벌 위상, 국제 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기초위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해서 충남의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실제로 2016년 KAIST가 수행한 ‘환황해권 미래전략 연구’는 실천 전략을 기존 중장기 계획에서 찾으려 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
 - 신선한 일부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전체 논리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존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임

제3절 지방 차원의 권역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중앙정부 차원의 초국경 권역 교류협력 네트워크 사례

① 발트해지역(Baltic Sea Regi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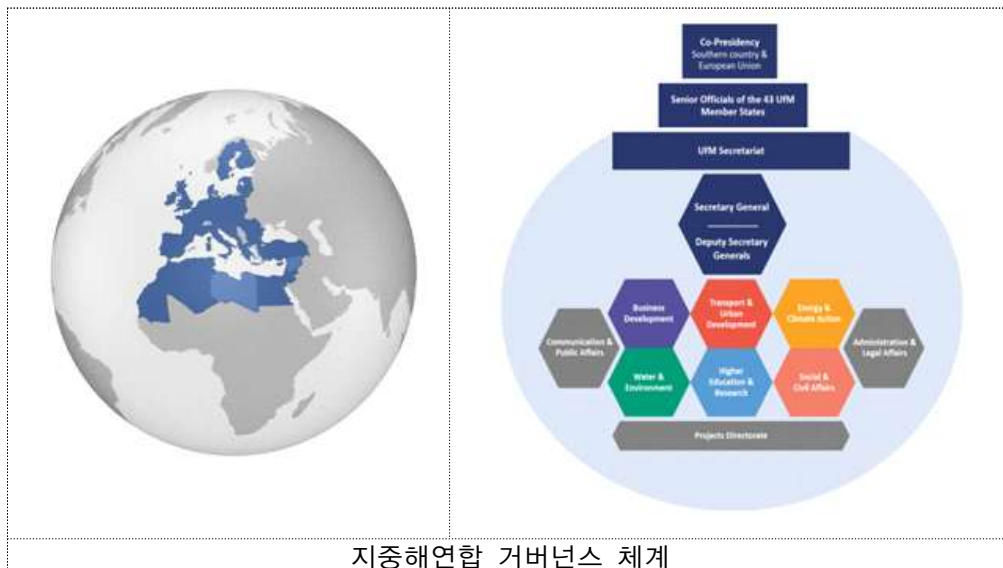
- 회원국 : 발트해 주변 EU8개국, Non-EU 3개국
- 협력목적 : 발트해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채택
- 운영방식
 - 정책 :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조정 : 정책영역 조정, 수평적 실행조정, 정책영역/수평적실행
 - 실행 : 프로그램/재원, 선도프로젝트, 핵심리더
- 논의분야
 - 해양의 보전 : 청정해양, 풍부하고 건강한 야생동물, 깨끗하고 안전한 항해
 - 지역간 교류협력 : 운송조건개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장, 역내 인적교류, 초국경간 범죄퇴치 공조
 - 지역발전 : 단일시장의 심화, 유로2020전략 이행, 발트해지역 국제경쟁력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위험예방 및 관리



<https://www.interreg-baltic.eu>

② 지중해 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2008~)

- 회원국
 - EU28개국+지중해연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15개국 총 43개국
- 협력목적
 - 유럽과 지중해국가 간 지역통합과 단결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 운영방식
 - 정상회의(격년에 1회 개최), 의장국(지중해 이북, 이남 국가가 한 나라씩 공동으로 주관)
- 논의분야
 - 지중해 오염의 저감, 바다 및 육상 고속도로, 시민보호, 대안에너지; 지중해슬라플랜, 지중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http://ufmsecretaria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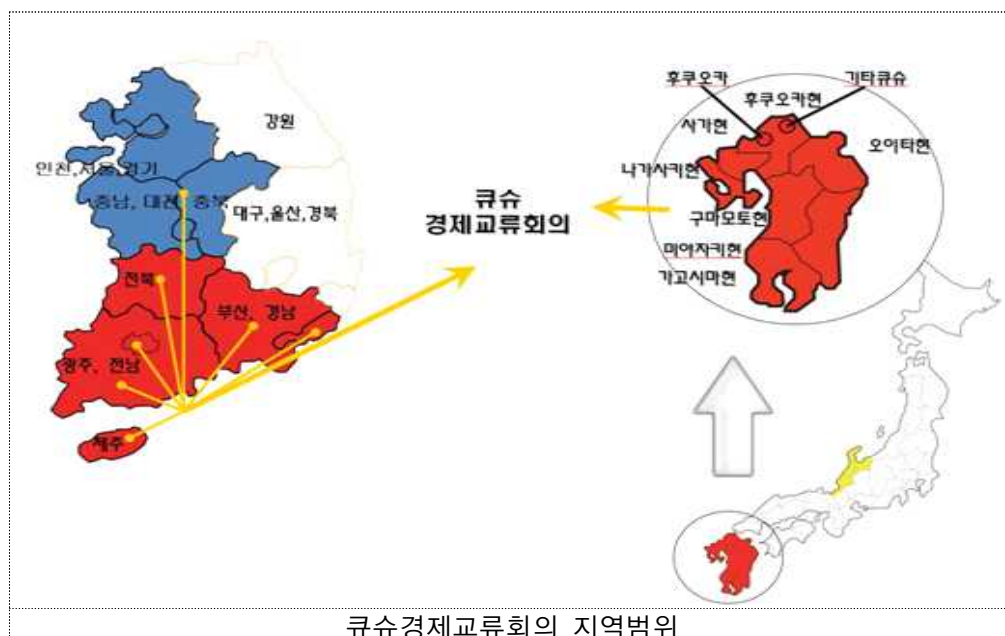
③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2001~)

- 회원국
 - 한국(서남해안 11개시도) :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 중국(환황해 3시4성) : 베이징, 톈진, 상하이, 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수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기타큐슈, 구마모토
- 협력목적
 -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지역, 일본큐슈지역의 경제교류를 통해 삼국 간 무역, 투자, 산업 기술협력의 확대를 도모
- 운영방식

- 3국 산학관 협력회의체 운영(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부무, 일본: 큐슈경제산업국/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참여)
- 매년 3국 순회개최(2016.7. 제15회 회의, 중국 옌청시 개최-녹색경제, 혁신성장과 개방, 융합 / 2017.11. 일본 가고시마현 개최예정)
- 논의분야 :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한중일 산업구조 고도화 등

④ 한일(큐슈)경제교류 회의(1992~)

- 회원국(운영주체)
 -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경제협회
 - 일본 : 큐슈경산국, 큐슈경제연합회
- 협력목적
 - 일본 큐슈지방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한일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확대를 도모
- 운영방식
 - 매년 양국 순회 개최 (2016.10. 제23회 회의,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 - 의공학제휴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 논의분야
 - 경제산업 시책의 상호이해, 정부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 비즈니스교류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논의



2. 지방정부 차원의 초국경 권역 교류협력 네트워크 사례

①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1992~)

- 회원지역
 - 한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 일본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 협력목적
 - 한국의 시도와 일본의 현(県)에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상호교류를 위해 매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운영방식
 - 양국 매년 순회 개최(2016.11. 제25회 회의개최 -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 논의분야
 - 지사교류회의, 수산관계 교류사업, 경제교류 촉진사업,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 연구기관 공동연구사업, 지역진흥단체 교류지원사업, 방재교류, 과학기술분야, 친환경농업분야 기술정보교류
 - 청소년교류사업, 주민친선이벤트사업, 지역전통공예교류사업

② 동아시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1994~)

- 회원지역
 - 한국 : 강원도 / 중국 : 길림성 / 일본 : 홋토리현 / 러시아 : 연해주 / 몽골 : 중앙동
- 협력목적
 - 환동해권 관광과 무역의 운송네트워크 구축
- 운영방식
 - 회원국 매년 순회 개최
 - 한국 :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주관
- 논의분야
 - 관광촉진협의회 : 각 지역의 관광정보 교환, 두만강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해상항로(속초-나진-훈춘)를 이용한 환동해권 다국관광 전개, 지역간 관광사증수속의 전제 추진
 - 경제협의회 : 육해공 운송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교류기반 조성 및 지역 간 홈페이지 개설 및 사이버무역 박람회 등 개최

③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1990~)

- 회원지역
 - 전 세계 100개국의 1,500여개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메가시티 등 모든 규모의 도시와 지방정부 포함)
- 협력목적
 - 세계 최대규모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네트워크로서 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을 촉진
- 운영방식
 - 세계 9개 권역구분으로 3년을 임기로 하는 회원의 대표를 거버넌스의 중심에 두고 세계집행위원, 권역별 대표집행위원으로 구성
 - 세계이사회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며, 9개 권역별 집행위원과 6인의 직능별 지명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함
- 논의분야
 - 범 지구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 기후변화세계시장회의, 생태교통, 녹색도시경제, 생물 다양성, 도시 지방 및 연방정부간 수직적 통합과 관계 등



④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1996~)

- 회원지역
 -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의 77개 광역자치단체 회원, 5개 읍서버 자치단체, 3개 국제지역협력기구(AER, R20, ICLEI), 지역의 전문연구소
- 협력목적
 -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 간 교류활성화 및 결속강화,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운영방식
 - 총회 : 회원국가 간 2년마다 순환개최
 - 실무자워크숍 : 매년 실무자워크숍을 통한 사업성과 및 주요업무계획 논의
 - 분야별 지역에서 분과위원회를 담당하여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 운영

○ 논의분야

- 경제인문교류, 교육문화교류, 환경분과, 방재분과, 변경협력분과, 과학기술분과, 관광분과, 해양어업분과,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 에너지기후변화분과, 여성아동분과, 농업분과, 생명의료산업분과, 체육분과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영문약자로 그 자체로 가깝고 친밀함을 뜻하는 영문단어 (near)이기도 합니다.

⑤ 제주포럼(2001~)

○ 공식명칭 : 평화와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포럼개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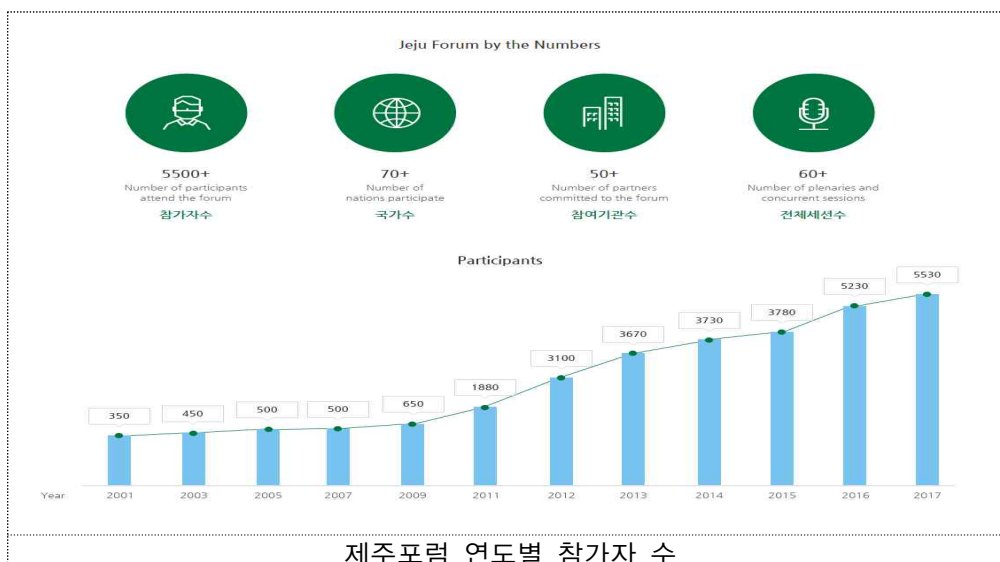
-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 모색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
-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포럼 개최지로서 위상 제고

○ 운영방식

- 매년 5월 제주도에서 개최하며, 세계 인사초청 방식임
- 논의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의 실무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 논의분야

- 외교.안보/경제.경영/환경.기후변화/여성.교육.문화/ 글로벌 제주로 구성되며 글로벌 제주에서는 제주지역연구기관들의 참여 지역현안 의제를 다룸.



<http://www.jejuforum.or.kr>

3. 초국경 권역 교류협력 네트워크 사례의 시사점

■ 대부분의 초국경 교류협력은 명시적 멤버십 구성을 갖추고 운영

- 제주포럼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는 멤버십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
 - 검토한 9개 사례 중 제주포럼을 제외하고 명확한 멤버십을 구성하고 있음
 - 제주포럼은 멤버십이 없이 매회 주제를 정하여 관련 유명인사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 명시적인 멤버십은 참여 성원 간 동등한 지위를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제주포럼의 경우 제주도가 주최하고 개별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대부분의 초국경 교류협력은 회원 간 순회개최 방식으로 운영

- 초국경 국제교류 협력은 순회 개최방식으로 수행
 - 회원 간 순회하면서 회원들이 주최자가 되는 기회를 갖도록 함
 - 국제 행사를 순회 개최하는 것은 주최측의 중요한 공공외교의 성과로서 회원의 충성도와 적극성을 유지하는데 기여

■ 교류협력의 권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후원, 지원 조직 확보

- 국제기구, 국가기관의 지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류협력의 권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은 관련 상위 기구나 관련 기구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임
 - 상위 기구나 관련 기구의 지원은 재정 후원, 인적 참여, 명의 등록 등 방식으로 다양함
 - 가령,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경우 중국과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상무부의 후원, 일본은 규슈경제산업국의 후원 등 정부차원의 후원이 교류협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협회, 단체 등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들을 확보하고 있음
 - 내용 및 실무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조직들을 갖추고 있어서 교류협력의 실질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이러한 협회, 단체 등은 사실상 교류협력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환황해포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멤버십, 후원 조직, 지원 조직 등의 보완이 필요함

- 멤버십 없이 운영되는 환황해포럼은 멤버십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환황해포럼은 현재 제주포럼과 유사하게 멤버십 없이 운영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을 위해 멤버십을 갖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멤버십의 구성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시각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함
 - ※ 환황해 지역이라는 지리, 환경적 공통성 이외에 충남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하거나 충남과 유사한 발전궤적을 그리는 지방정부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상급 기구 또는 관련 기구의 후원을 확보하여 교류협력의 권위와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 환황해포럼은 현재 상급 기구나 관련 기구의 후원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
 - ※ 2017년 제3회째부터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과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시작
 - 정부의 지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이외에 국제기구의 후원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실무적으로 환황해포럼을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 또는 조직을 확보해야 함
 - 현재 환황해포럼은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도청, 행사용역사, 충남연구원 등이 협력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내용의 축적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시급히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포럼 추진이 가능

〈표 3-2〉 초국경 권역 교류협력 네트워크 사례 종합

차원	명칭	창립년	멤버십	주요 의제	개최방식	지원 및 후원 조직
국가	발트해 지역	2009	○	부문(해양)	순회	EU, 국제은행
	지중해 연합	2008	○	부문(해양환경)	순회	Euro-Mediterranean 플랫폼 정책협력기관(35), 사업지원기관(39), 금융지원기관(국제8, 공공4, 민간3)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2001	○	부문(경제협력, 무역)	순회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상무부, 일: 규슈경제산업국
	한일(규슈)경제교류회의	1992	○	부문(경제협력, 무역)	순회	한: 산업통상자원부, 한일경제협회 일: 규슈경산국, 규슈경제연합회
지방	한일해협연안 시도협지사 교류회의	1993	○	종합	순회	'91년 한·일 외무부장관 회담시 「한·일 자치단체간 교류촉진 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한데 따름
	한동해권 지방정부지시성장회의 (현 동아시아 지방정부지시성장회의)	1994	○	부문(관광, 무역)	순회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현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1990	○	부문(환경, 지방정부)	순회	사무국 운영, 세계 9개 권역별 대표집행위원
	동아시아지자체연합(NEAR)	1996	○	종합	순회	사무국 운영, 외교부 후원
	제주 포럼	2001	×	종합	고정	제주도, 외교부 후원

제4장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기본구상

제1절 전략의 비전

제2절 핵심전략

제3절 주요사업 제안

제4절 전략의 추진체계

제1절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의 비전

1. 기존 비전체계에 대한 검토

■ 기존 비전체계는 환황해포럼에서 차용한 비전체계가 유일함

- 환황해포럼 출범 당시 비전, 목표, 전략을 구상한 바 있음
 - 비전은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로 설정
 - 목표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성” 으로 설정
 - 전략을 “환황해 지역의 번영, 공생, 평화” 로 설정

비전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목표	•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성
전략	• 1. 환황해지역의 번영(繁榮) • 2. 환황해지역의 공생(共生) • 3. 환황해지역의 평화(平和)

[그림 4-1] 기존 비전 체계(용역 제안서)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라는 비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환황해특위 자문의견)

- “지중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문명의 교차로”
 - 지중해는 다양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지중해의 성격은 지중해가 역내 번영과 세계문화의 발원지로서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기반이 됨(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헬레니즘 등)
- 황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만나는 바다
 -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역임
 - 민족주의 가치와 세계시민주의 가치가 만나는 지역임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라는 비전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지중해의 긍정적 이미지와 황해가 추구해야 할 이미지가 합치하고 있음
 - 다만, 두 단어 모두 지명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

■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는 다소 추상적임

- 목표 설정에는 수긍하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다수임
 - ‘아시아’라는 지역 범위는 환황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 ‘평화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는 환황해포럼이 추구하는 목표로서는 추상성이 높아 밀착성이 떨어짐
- 추상성 문제의 근원은 2가지가 있음
 - ‘평화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는 지방정부인 충남도가 주도하는 교류협력의 목표라기 보다는 국가적 의제 성격을 가짐
 - ‘평화공동체’라는 문구는 현 상황을 ‘대립’, ‘긴장’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시켜 정치 군사적 규정이 강함
- 한편, 문제가 문구 자체가 아니라 추진 전략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는 최고의 가치임에 분명하며, 평화가 번영과 공생의 기반이자 결과라는데에 이견은 없음
 - 다만 이러한 원대한 목표 설정을 위한 실현 전략이 가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

■ 전략으로 제시된 “번영, 공생, 평화”의 모호성이 두드러짐

- ‘번영, 공생, 평화’라는 전략은 추상성이 강함
 - 전략은 통상 비전이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향후 제시될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 판 작용을 함
 - 그런데 제시된 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목표를 표현하는 표어로 인식되고 있음

■ 기존 환황해 비전 체계를 선택적으로 계승하여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존 비전 체계는 환황해포럼 추진을 겨냥한 비전 체계임
 - 기존 비전체계는 환황해포럼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비전체계임
 - 또한 기존 비전체계가 환황해포럼의 비전체계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특히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 ‘번영, 공생, 평화’라는 전략은 추상성이 높다는 지적이 큼

- 기존의 비전체계를 일부 계승하는 방향으로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존 비전체계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충남이 글로벌화 비전체계로서 연구되거나 제시된 것은 없음
 - 따라서 기존의 비전체계를 일부 계승하는 방향으로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2.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지위 검토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충남 글로벌 외교 전략과 환황해 전략이 혼합된 성격을 가짐

- 충남에게 환황해권 비중이 막대하나 환황해 비전이 글로벌 비전은 아님
 - 충남은 지금까지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으며, 관련 비전체계는 앞서 검토한 환황해포럼의 비전체계가 유일함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충남에게 매우 중요하나 이것이 글로벌화 전략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
- 글로벌 외교비전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전략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본 연구가 수립하는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사실상 충남의 글로벌화 전략과 환황해 전략을 혼합한 성격을 가지게 됨
 - 글로벌화 전략은 지리적 범위가 전 세계이며 충남외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계획임. 가령, 공적개발원조(ODA), 대북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전략임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환황해라는 지리적 범위에 한정하여 펼치는 외교 전략으로 주로 중국, 일본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교류협력을 위주로 함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또한 환황해포럼 전략과 구분되어야 함

- 포괄 범위를 보면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환황해 포럼 전략을 포함함
 - 환황해포럼 전략은 포럼이라는 형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아내는 것으로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의 일부 내용에 해당
 - 지리적으로 환황해포럼은 협의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나 환황해글로벌화 전략은 광의의 범위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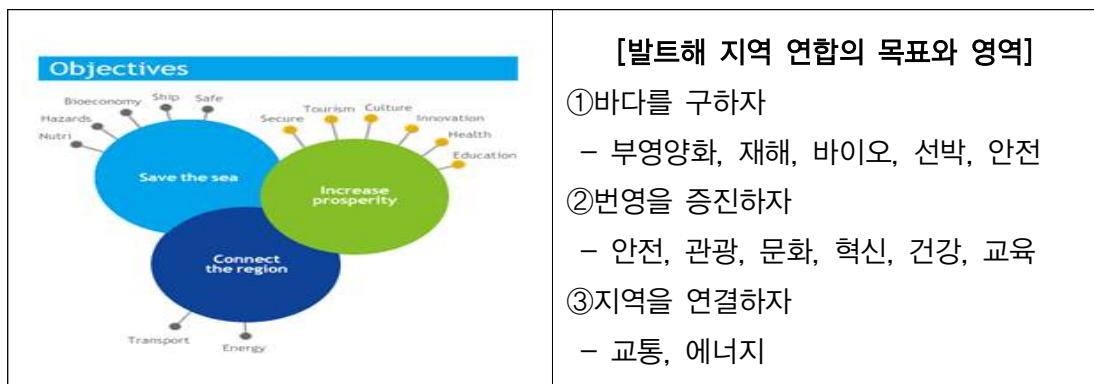
- 환황해포럼이 시기적으로 이미 출범하고 비전체계를 수립했음을 고려, 본 전략은 실행전략과 사업(정책 또는 단위사업)의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비전, 목표, 전략 등 비전체계의 재논의가 아니라 이러한 비전체계를 구현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 환황해포럼이 3회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환황해포럼의 향후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함

제2절 핵심전략

1. 전략 수립의 원칙과 틀

■ 기존 비전체계의 “번영, 공생, 평화”의 틀을 계승하되, 충남의 글로벌화 전략 차원을 결합하여 전략을 수립

- 기존 전략으로 제시된 “번영, 공생, 평화”의 틀을 계승하도록 함
 - 비록 “번영, 공생, 평화”가 추상적이기는 하나 사업영역의 발굴을 위한 설정으로서는 유용
 - 발트해 연합이나 지중해 연합과 같은 유사 사례에서도 이러한 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략 수립을 위해 충남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결합하여야 함
 - 충남의 전략으로서 “의제화, 국제화, 세력화”를 결합하여 사업영역을 도출하도록 함
 - “의제화”란 환황해 권역 차원의 정책 이슈 주도 역량과 환황해 권역 이슈의 생산과 확산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환황해 권역 미래이슈를 선점하여 제시하는 것을 의미
 - “국제화”란 충남의 지역개발 및 지역문제해결 경험을 환황해 권역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충남의 경험과 자원을 국제 교류협력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세력화”란 환황해 권역 내에서 공공 및 민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확대, 환황해 이슈 및 전략 주도 그룹을 육성하는 것으로, 충남의 국제적 위상에 조응하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발현을 의미

※ 상세 내용은 『충남 지방지방외교3.0 전략연구』(홍원표, 2016) 참조

■ “의제화, 국제화, 세력화” 전략을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의 개념틀로 활용함

- 미래에 중요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국제적 의제화 추진
 - 한국, 중국, 일본 등 환황해 지역 주요 국가는 사회발전 단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직면한 미래 이슈를 갖고 있음
 - 글로벌 메가시티 지역(Global Mega City Region)의 형성, 역내 경제공동체의 형성,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이 대표적임
 - 이에 따라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
- 충남의 경험과 자원의 국제적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국제화 하도록 함
 - 충남은 전형적 농촌지역에서 신공업지역으로 단기간에 탈바꿈한 지역임
 -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였고 해결해 왔음.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타 지방정부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충남의 사회, 환경, 경제, 문화, 역사 등 측면에서 축적한 자원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소구력을 갖고 있어 국제 교류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가능함
- 충남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걸맞게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함
 - 충남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신흥성장지역이 되었으며, 산업과 정치 측면에서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충남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은 미미하며 존재감 또한 작은 상황임
 - 따라서 충남의 정체성에 근거한 영향력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2. 핵심 전략 영역

■ {번영, 공생, 평화}와 {의제화, 국제화, 세력화}를 두 축으로 매트릭스 구성하여 핵심 전략 도출

- 번영, 공생, 평화라는 비전 체계를 계승하여 핵심전략 도출의 한 축으로 설정
- 의제화, 국제화, 세력화하는 전략을 다른 축으로 설정

■ 이러한 3×3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9개 전략 영역을 도출

- 환황해권 번영 인프라 구축: 교통, 에너지, 교역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
- 한중일 산업 교류협력 촉진: 문화, 의료, 관광, 농업 등의 산업협력 촉진
- 한중일 공동 협력네트워크 개발: 각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인 청년 창취업, 해운업 등에서 공동 네트워크 구축
- 상호 문화 이해 증진: 언어, 음식, 음악 등 문화를 중심으로 상호 이해 촉진
- 충남 경험의 국제적 전파: 태안 자원봉사정신, 충남의 정책 등 경험 국제 전수
-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 구축: 유사한 위상에 근거한 국제 지방정부(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구축
- 한중일 청(소)년의 교류 촉진: 청소년, 청년들의 인적 교류 확대 및 공고화
- 충남 섬 자원의 평화적 이용: 격렬비열도의 전략 자원화 등 충남의 섬 자원이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제 협력 논의 플랫폼 구축: 각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사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

〈표 4-1〉 환황해 글로벌화 핵심 전략영역

구 분	번 영	공 생	평 화
미래이슈 의제화	역내 번영 인프라 구축	상호 문화 이해 증진	청(소)년 국제 교류 촉진
자원의 국제화	역내 산업 교류협력 촉진	충남 경험의 국제적 전파	충남 자원의 평화적 이용
국제무대 세력화	공동 협력 네트워크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제협력 논의 플랫폼 구축

제3절 주요사업 제안

1.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발굴

■ 연구진의 연구와 환황해특위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실현을 위한 30개 사업을 제시함

- 번영을 위한 10건 사업, 공생을 위한 13건 사업, 평화를 위한 7건 사업으로 구성
- 미래이슈 의제화 10 건, 자원의 국제화 11건, 국제무대 세력화 9건으로 구성

■ 이 중 단계별 추진의 각도에서 중기 21건 사업 , 장기사업 9건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함

- 중기사업은 5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의미하며, 장기사업은 5년 이상 장기간 추진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업임
- 중기사업은 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전통문양국제공모전, 한중일 6차산업 안테나숍 개설, 청년 창업 국제 교류회, 특화 향만연합 결성, 무장애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쌀 문화 페스티벌, 환황해권 오염 모니터링, 지방정부 우수정책 콘테스트, 충남 환경상 제정, 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콘텐츠 공모전, 여행 플래너 상호 파견,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결성, 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 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환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환황해포럼 진화 등 21건임
- 장기사업은 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천연가스관라인, 국제농수산물거래소, 의료관광 네트워크, 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황해 갯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대학 간 교과과정학점인증, 격렬비열도 전략자원화, 환황해연구원 설립 등 9건임

- 30건 사업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표 4-2〉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핵심사업 목록

구 분	번 영	공 생	평 화
미래이슈 의제화	1)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2)한중 천연가스관라인 선점 3)국제 농수산물거래소 4)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11)무장해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12)쌀 문화 페스티벌 13)환황해 오염 모니터링 14)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24)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25)대학 간 학점 상호인증
자원의 국제화	5)전통문양국제공모전 6)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7)농업6차산업안테나숍 개설 8)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15)충남 환경상 제정 16)국제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17)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18)여행플래너 상호 파견	26)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27)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28)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국제무대 세력화	9)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10)특화 항만연합 결성	19)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20)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 21)황해 갯벌 네트워크 구축 22)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23)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29)환황해포럼 진화 30)환황해연구원 설립

〈표 4-3〉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핵심사업 요약

구 분		사업명	중장기 구분	사업예산	추진주체
변영	미래이슈 의제화	1) 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장기	11.5억	미래성장본부
		2) 한중 천연가스관라인 선점	장기	6.8억	미래성장본부
		3) 국제 농수산물거래소	장기	5.0억	농정국
		4) 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중기	1.5억	농정국
	자원의 국제화	5) 전통문양국제공모전	중기	9.5억	미래성장본부 · 경제통상실
		6) 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장기	4.0억	보건복지국 · 문화체육관광국
		7) 농업6차산업안테나숍 개설	중기	1.6억	농정국 · 농업6차산업화센터
		8)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중기	1.5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충남벤처협회
	국제무대 세력화	9) 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장기	4.5억	경제통상실
		10) 특화 항만연합 결성	중기	1.8억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
공생	미래이슈 의제화	11) 무장애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중기	2.1억	국토교통국
		12) 쌀 문화 페스티벌	중기	4.0억	농정국
		13) 환황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중기	4.0억	해양수산국
		14) 지방정부 우수정책 콘테스트	중기	1.0억	미래성장본부
	자원의 국제화	15) 충남 환경상 제정	중기	1.5억	기획조정실, 경제통상실
		16) 국제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중기	1.3억	충남연구원
		17)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중기	1.5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18) 여행플래너 상호 파견	중기	3.4억	문화체육관광국
	국제무대 세력화	19)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중기	1.6억	미래성장본부 · 충남연구원
		20) 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	중기	7.0억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21) 황해 갯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장기	9.0억	해양수산국
		22) 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중기	9.0억	미래성장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23) 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중기	8.5억	미래성장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평화	미래이슈 의제화	24)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중기	4.6억	미래성장본부 · 여성가족정책관
		25) 대학 간 교과과정 학점 및 인증	장기	0.6억	충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
	자원의 국제화	26) 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장기	6.0억	해양수산국
		27) 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중기	3.0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8) 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중기	1.7억	문화체육관광국
	국제무대 세력화	29) 환황해포럼 진화	중기	1.2억	미래성장본부
30) 환황해연구원 설립		장기	23.6억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합계				142.3억	

2. 환황해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

〈표 4-4〉 환황해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

구 분	사업명	설명	비고
미래이슈 의제화	1) 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2) 한중 천연가스관라인 선점 3) 국제 농수산물거래소 4) 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경기도 중심 논의를 충남 주도로 전환 가스관 한국 지점 후보로 충남 부각 한중일(만) 농산물 국제거래소 충남 설치 실버푸드 육성을 통한 충남 농식품업 발전	중국 산둥성 중앙정부 농수산물통공사 지방정부 간
자원의 국제화	5) 전통문양국제공모전 6) 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7) 농업6차산업안테나숍 개설 8)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한중일 전통문화유산 디자인 공모전 각국 건강보험, 해외관광 결합 시스템 구축 6차산업화 제품 및 창업사례 교류 청년 창업 경험의 국제적 교류	공주, 부여 정부, 의료법인 지방정부 간 충남 벤처협회
국제무대 세력화	9) 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10) 특화 항만연합 결성	국제 네트워크 구성 통한 국제창업 촉진 서산항 특화 발전 촉진	한중일 지방정부 중국 항구도시

1.1. 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연결 인프라 사업에서 잠재적인 충남의 입지 우위를 대중적으로 각인할 필요가 있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을 연결하는 인프라는 주로 한중해저터널이나 한중열차페리 등 방식이 제안되어 논의되어 왔음 기존 제안은 대개 산동성과 인천, 경기도와의 연결하는 노선 위주이며, 충남을 연결점으로 하는 제안은 논의된 바 없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태안-격렬비열도-산동 웨이하이 연결 노선의 타당성 공론화 본 노선의 입지적 우위와 경제성에 대한 인식 확산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 3건 한중일 해저터널 신규상(한중일 공동연구), 타당성 연구(교통연구원 등), 관련 지원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세미나: 한중일 국제세미나, 한중 세미나, 국내세미나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11.5억 연구사업(산동-태안반도 해저터널 구상 연구 등) : 2.5억*3건 국제세미나(한중일 해저터널 관련 한중일 지방정부 참여): 0.5억*6회 기타활동: 1억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중국 산동성, 일본 시모노세키 등 국내: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의 장기적 성격에 비추어 단계 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결정 필요(성동격서 전략의 채택 여부) 중국 산동성,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일본(시모노세키) 등 이해당사를 묶어내는 창의적 방법 고민이 필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반도를 한중 인프라사업의 시발점으로 대중적으로 각인 한중 인프라사업을 충남에 유치하는 유리한 환경 조성

1.2. 한중 천연가스관 라인 선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연결 인프라 중 하나인 천연가스관 라인의 유력 노선인 산둥성~충남 노선을 선점하여 한중 인프라 연결에서 충남 입지 공고화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러시아와 야말(북극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러시아, 중국 등을 거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구상 중임 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왜빙LNG선을 고리로 러시아와 한국 조선사와의 협력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산둥 노선을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의 유력노선으로 공론화 본 노선의 입지적 우위와 경제성에 대한 인식 확산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용역: 한중 연결 노선의 충남 입지 논리의 정교화 추진(한중러 공동 연구) 세미나: 한중러 국제세미나 주최(한국에너지재단 협력)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6.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사업(한중러 서해안 천연가스관 연결 구상 등): 1.5억*3건 세 미 나(동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0.3억*6회 기타 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중국 산둥성 등 국내: 한국에너지재단, 중앙부처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가스 운송 방식이 다양하므로 가스관을 통한 운송 자체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자체의 불확실성 상존 장기적 사업이므로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그랜드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반도를 한중 인프라사업의 시발점으로 대중적으로 각인 한중 인프라사업을 충남에 유치하는 유리한 환경 조성

1.3. 국제 농수산물 거래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의 소득증대에 따라 고품질 농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충남의 농수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증대로 연결해야 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농수산물은 일본 수출 의존이 크며, 중국 시장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농수산물 수출은 민간업체와 일부 공기업(NH무역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 인프라지원이 필요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에 충청권 일원의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거점으로서 중앙공기업과 충남이 공동으로 국제 농수산물 거래소 설치·운영 - 농수산물 거래소를 핵으로 주변에 농수산물 가공, 포장, 물류 등 산업 활동을 육성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TF 운영: 국제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의 타당성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한중일 공동 연구) - 연구용역: 국제 농수산물 설립 방안 연구 - 세미나: 한중일만 국제세미나 주최(aT, NH무역과 협력)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0억 - 공동 TF활동(구상의 타당성 검토): 1.5억 - 연구용역(국제 농수산물 거래소 구상 등): 1.5억*2회 - 기타 활동: 0.5억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둥성, 허베이 유통기관 등 - 국내: AT, NH 무역, 농림수산물식품부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국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출기업들의 이해관계, 중앙공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묶어낼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관건 - 농수산물 거래소를 이용할 해외 바이어(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와의 협력체계 확보로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여야 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고용 증대 - 농수산물 거래소를 계기로 가공, 포장, 물류 등 분야에서 충남의 수준을 상승시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1.4. 동아시아 실버 푸드 박람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실버산업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 - 충남의 다양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고령화라는 공통의 추세를 실버푸드(silver food)를 매개로 하여 각 지역의 농식품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실버푸드 시장규모가 2011년 5104억원(2011년)에서 7903억원(2015년)으로 최근 5년간 54.8% 성장. 전국 노인 전문 복지시설(요양병원) 수 급증으로 실버푸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 큼 -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이며, 중국도 2030년 경 고령화 사회 진입예상. 이에 따라 동북아 실버푸드 수요 증가 예상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실버 푸드 박람회를 개최하여 수요 발굴과 공급자 간의 국제 네트워킹 촉진 - 충남(충청)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지역의 농식품업 발전 촉진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에 심포지엄, 전시, 이벤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교류 마련 - 각 지방정부가 후원하고 순회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로 개최하며, 충남지역의 민간업체를 비롯하여 중앙 및 민간협회의 참가 유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억 - 박람회 참가: 1.0억*1건 (매년 3국이 순회하면서 개최) - 기타 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 관련 협회 - 국내: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지역 관련 협회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농정국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행사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 있으므로, 독자적 행사보다는 타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요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 농식품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국제화 촉진 - 고령화 관련 한중일 공동협력 계기 마련

1.5. 전통문양국제공모전

필요성		- 한중일 전통문양 발굴 및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충남을 전통문양 산업화의 메카로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황		- 충남의 경우 백제문양 개발(2007) 및 충남민속자료를 토대로 충남민속문화상품개발(2010) 등을 추진해 왔음 - 전통문양 분야 산업화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각기 추진 중으로 충남 주도 국제공모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사업개요	내용	- 충남은 백제 및 충청유교 등 풍부한 역사자원들을 바탕으로 전통문양의 원천소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통문양국제공모전을 추진하여 충남을 전통문양 산업화의 메카로 육성
	추진방식	- 연구활동: 한중일 전통문양국제공모전 타당성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구원), 한중일 전통문양 산업화 현황과 과제 연구(충남연, 문화산업진흥원), 관련 지원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 전통문양국제공모전 개최 - 세미나: 한중일 국제세미나, 국내세미나
	예산	• 약 9.5억 - 연구사업(국제 전통문양 디자인 공모 기획 등): 1.5억*3건 - 전통문양국제공모전 3억*1건 - 세 미 나: 1.5억*1회, 0.5*1회
	협력대상	- 국외: 중국 및 일본 자매결연 지방정부 등 - 국내: 경상북도(19회에 걸친 국내 전통문양공모전 개최)
	추진주체	-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경제통상실(기업통상교류과)
애로사항		- 전통문양국제공모전은 공모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한 거래 활성화, 그리고 전통문양 연계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요구됨 - 충남을 한중일 전통문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 반영가능성 타진
기대효과		- 충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통문양 산업화 기반 조성

1.6. 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의료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충남이 주도하는 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천안, 아산지역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양·한방 협진의 온천의료관광 구축사업으로 선정 - 단국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중일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 자격증 부여
사 업 개 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청 내 의료관광 전담부서의 설치, 의료관광육성위원회 설치 등 - 한국(충남/대전)-중국(산둥)-일본(구마모토) 지방정부간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정 체결 - 대학병원/병원, 지역상공회의소, 관광협회가 연계하여 의료관광과 음식관광의 연계가능성을 위한 상호방문단 구성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 한중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지방정부 연구원) - 세미나: 한중일 국제세미나, 국내세미나(연구원, 대학교수, 병원관계자, 관광전문가 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억 - 연구 사업(잠재 수요조사, 제도 정비 방안 등): 2억 - 세 미 나: 0.2억*5회 - 상호방문 등 : 1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둥성, 일본 큐슈 구마모토 등 - 국내: 충청도, 대전시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 문화체육관광국(관광마케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개 국 간 의료관광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각국 간 국제 의료관광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확인 및 공유 필요 - 의료관광이 목적이긴 하지만, 각국의 일반관광 및 음식관광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필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의료관광을 통한 충남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 - 충남을 양·한방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환경 조성

1.7. 한중일 농업 6차산업 안테나숍 개설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은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국가 농정차원에서 추진 중 - 한중일 상호간 6차산업 상품의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국 내 농업 6차산업 안테나숍 개설, 운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국 내 6차산업 안테나숍 30여 곳 설치, 운영중 * 일본 도쿄에는 2013년 현재 50여개의 지자체 안테나숍 운영 중 - 충청남도는 2015년에 중국 서안과 정주에 6차산업 우수제품 현지유통품 평회 개최 - 현재는 정치적 문제로 한중 관계가 냉각되어 있으나 중국, 일본 소비자들 의 한국 6차산업 상품(농식품, 농가공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높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6차산업 안테나숍 공동 설치 ; 한국(충남), 중국(산둥), 일본(시즈오카)에 공동으로 설치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회의(세미나) - 한중일 농업 6차산업 안테나숍 설치 기본구상안 공동 연구 - 한중일 실정에 맞게 각국 설치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6억 원 - 세미나: 5백만 원 * 2회 = 1천만 원 - 공동연구: 5천만 원 (각국 균등 부담 또는 충남도 전액 부담) - 안테나숍 설치: 10천만 원(임대료, 매장 설치 등)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둥성, 일본 시즈오카현 - 국내: 충남도, 대전시 등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국(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별 한중일 3국의 6차산업 상품을 홍보, 판매해야 하므로 6차산업 상품의 신속한 조달에 어려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도모 - 한중일 농식품 판로 개척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

1.8. 청년 창업 국제 교류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계층의 창·취업은 동아시아 모든 지방정부의 현안이자 과제임 - 청년 창업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상호 협력 분야를 확인하고 실천하고자 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계층의 취업은 주로 국가 내지 지역 차원에서 고민되고 정책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경험 교류와 상호학습은 미미한 상황임 - 지자체 차원에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탐방단을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파견하는 활동 전개.
사업 개 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이 중국, 일본 등 국가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청년 창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회를 개최하여 충남(충청) 지역 청년 창업을 전파하고 국제 학습기회를 갖는 사업 - 이를 통해 충남의 대학 및 기업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와 글로벌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활동: 시행 방안 연구용역 수행 - 충남의 대학과 창업보육센터와 협조하여 우수사례(실패사례 포함)를 선발하고 민간 차원에서 교류회 개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억 - 연구사업(지역별 유사사례 조사연구): 0.5억*1건 - 조직운영 지원(충남 민간협회 활동 지원): 0.5억*1건 - 기타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허베이, 장수성, 산둥성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협회 - 국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벤처협회
	주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벤처협회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여 조직 간 역할 분담 - 성과의 확산과 가시화 방식 고민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창업의 촉진 매개체 작용 - 충남 벤처의 국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

1.9. 한중일(만) 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취업은 각국 지방정부의 공통관심사로서 국제 협력의 중요한 내용임 - 각국 지방정부의 고립적 정책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지방정부는 청년들의 창취업 확대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며, 관할 지역의 창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음 - 또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시각이 없는 상황임
사 업 개 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이 중국, 일본, 대만 등 각국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 정부간 네트워크 형태로 상호 교류 및 지원 체계(투자자, 시장 정보 등)를 갖춘 국제창업지구를 창설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 - 지방정부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의제화하여 추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사업(각 지역 관련 제도 및 현황 조사·연구 등): 1.0억*3건 - 세 미 나(한중일만 국제세미나): 0.5억*2회 - 기타 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허베이, 장수, 일본 쿠마모토, 시즈오카, 대만 미정 - 국내: 경남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경제통상실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제도적 여건이 상이하므로 추진 속도 및 방식 조율이 어려움 - 충남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창업지구를 국제 교류협력의 창구로 자리매김 - 충남의 창업지구의 성공률 제고

1.10. 특화 항만 연합 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을 국제적인 항구로 육성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지역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함 - 인천항, 당진·평택항 등 서해안 항만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은 현재 총 31 선석(국가 4, 민간 27)으로서 주로 석유화학업체의 전용부두로 활용되고 있음 - 대산항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관문으로서 주목되고 있으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함
사업 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과 유사한 위상을 갖는 각국 항만과의 연합을 결성하여 상호지원 및 발전방향을 공동 모색하는 사업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유사한 위상을 갖는 항만의 선정 및 교류 추진 - 연합 구성원 간 상호 지원 실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8억 - 연구 사업(대산항 특화발전 방향): 0.5억*2건 - 교류 활동(파트너 항만의 발전방향과 보완성 탐색 중심): 0.2억*3회 - 기타 활동: 0.2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산둥 룽옌, 장수 뢰원강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은 대중국 교역이 가장 중요하나 정치외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대산항은 인천항, 당진·평택항과의 역할 분담이 및 협조체계 필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음 - 실천 과정을 통해 대산항의 지위 재정립 촉진

2. 환황해 공생을 위한 핵심사업

〈표 4-5〉 환황해 공생을 위한 핵심사업

구 분	사업명	설명	비고
미래이슈 의제화	11) 무장애도시 상호모니터링 교류 12) 쌀 문화 페스티벌 13) 환황해 오염 모니터링 14)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취약계층이 안전한 무장애 도시 확산 교류 “쌀”을 매개로 축제 차별화 청청 황해를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부문 우수정책 교류 및 협력의 장	천안시, 내포시 중국남부, 베트남 정부PJT 결합 국제 교류
자원의 국제화	15) 충남 환경상 제정 16) 국제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17)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18) 여행플래너 상호 파견	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 등 기념적 환경상제정 충남 정책경험 전수 채널 확보 외국인의 충남에 대한 인상 콘텐츠화 상대방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상호 지원	태안군 KDI School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중국 허베이, 구이저우
국제무대 세력화	19)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20) 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 21) 황해 갯벌 네트워크 구축 22) 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23) 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충남 주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환황해지역 백제문화권 관광교류 활성화 갯벌 보존 및 복원 위한 네트워크 유교를 공통언어로 한 지역 간 네트워크 각 지역 전통마을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지방정부 싱크탱크 백제문화제 한중 연안 지방정부 충청유교문화원 송악 외암마을 등

2.1. 무장애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도시나 지역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무장애 도시 확산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 간 모니터링단을 상호 교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무장애도시 건설노력의 확산 촉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부터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 운영 - 충남에서는 내포신도시와 천안시가 무장애 도시 인증 추진 중 ※천안시 무장애도시 만들기 활동은 2015 SD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도시들이 상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류단을 구성하고 대상 도시에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파견 - 대상 도시의 자체 모니터링단과 공동으로 건축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 해당 도시정부 및 언론 매체에 제공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에서 무장애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시군의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파트너 도시들과 모니터링단 정기 교류 - 파트너 도시들의 민간단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니터링 실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사업(각 지역 관련 사례와 현황 조사): 0.3억*2건 - 모니터링 활동 지원: 0.4억*3회 - 기타 활동: 0.3억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만 무장애도시 만들기에 참여하는 도시정부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국토교통국, 각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 및 민간단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유무와 역량이 각 나라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우에 따라 민감한 사안일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의 폭과 대외공개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활동을 통해 충남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신인도 향상 - 충남 자체의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기여

2.2. 환황해권 “쌀” 문화 페스티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권 국가들의 농업은 벼농사 중심으로 ‘쌀’ 과 관련 다양한 전통적 음식이 있음. 또한 각국 독특한 저장(발효)음식도 발달되어 있어 음식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젓가락페스티벌: 2015년부터 개최, 청주시 주관 - 월드 한식페스티벌: 농림축산식품부 - 환황해권 국가들 간의 쌀 또는 저장(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됨
사업 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국가들 간의 ‘쌀 문화페스티벌’ 또는 ‘쌀+저장(발효)음식 문화페스티벌’ 기획 및 개최 - 음식문화와 더불어 ‘쌀’, ‘저장음식’ 관련 민속 문화도 포함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황해권 쌀 문화 페스티벌(가칭)’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환황해권 쌀 문화 페스티벌(가칭)’ 개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억 -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0.5억×1식 - 환황해권 쌀 문화 페스티벌 개최: 1억×1식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 중국 산둥성, 구이저우성, 일본 구마모토현, 시즈오카현, 베트남, 필리핀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국(농업정책과 또는 친환경농산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음식문화 페스티벌과의 차별성 찾기가 어려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권 국가들 간의 민간 교류 활성화 기대 - 쌀 소비 증가 및 쌀의 소중함 제고

2.3. 환황해권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공동번영의 공간으로서 환황해권의 해양물류 증가, 기후변화 관련 재해방지와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서해안을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등에서 권역 내 국가 간 해양환경 협력사업 추진 중 - 도내 해양환경 모니터링 측정망 30개소 운영 중, 향후 50개소로 확대·운영 추진
사 업 개 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해안, 산동성, 장수성 등 해양환경측정망 정보 공유 -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개입 이전에 지자체 단위의 해양측정망 통계자료 생산과 가동으로 상생의 바다 인식 확산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활동: 해양환경 측정망 가동(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충남연 등), 관련 지원 연구(충남연 등) - 세미나: 한중일 해양환경 세미나, 한중 세미나, 국내세미나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억 - 조사사업: 2억×1식 - 세 미 나: 0.5억×2회 - 기타활동: 1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동성, 장수성, 일본 큐슈 지자체 등 - 국내: 인천시, 경기도, 전북도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해양폐기물 관련 정보공개 사안의 폐쇄성에 비추어 단계별 정보공유 목표 설정과 정보 접근성 개선 - 중국 산동성, 장수성, 일본(큐슈 구마모토현) 등 해양환경정보 공개관련 해당국 이해당사자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 고민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내 초국경 해양공간관리(MSP) 선점 시행으로 신뢰 인프라구축 -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해양환경분야 협력체계 구축으로 급변하는 국제규범 대응체계 마련

2.4. 한중일 지방정부 우수 정책 콘테스트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지방정부 실정과 특성을 살린 독특하고 실효성 있는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한중일 3국간 교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옴 - 한중일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중심이 된 교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움
사 업 개 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 공유와 확산 - 한중일 지방정부 정책 입안자들 간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지방정책 콘테스트: 매년 각국 순회하는 형식으로 실시 - 우수 정책 현장 방문: 상기의 콘테스트와 연계하여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현장을 방문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이해 기회 마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억 기본계획 수립 용역: 0.5억 심포지엄: 0.5억*1회 (매년 한중일 순회, 3년마다 개최)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국 산둥성, 허베이, 구이저우성 등 - 일본: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한중일 각 지방 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 필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를 통한 충남 도정 시책 발굴 - 한중일 지방정부 공무원들 간의 교류 활성화

2.5. 충남 환경상 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사례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시 전국에서 모인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 해양경찰, 군인, 공무원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음 - 이러한 숭고한 자원봉사 정신과 재난극복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의 환경상 제정이 필요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국제 환경상, 자원봉사상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은 없음 - 국내 언론기관, 비영리법인이 시행 중인 환경상은 조선일보 환경대상이 있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권역 환경 및 자원봉사 활동 제정으로 지역이미지 고양 - 국제적 자원봉사 및 협력정신 함양으로 상생의 바다 인식 확산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 후보자 공적 심사 - 시상 및 관련 행사: 환황해권 협력 세미나 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금: 1억×1식 - 기획연구: 0.5억×1회 ※ 별도로 상금 재원확보방안 확보 필요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일본 외에 동아시아권역 지자체 등 - 국내: 광역자치단체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경제통상실(국제교류협력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격년제 지속시행을 위한 상금 재원조달 - 중국, 일본 외에 동아시아 또는 국제 범위로 확산 - 태안환경상의 대외적 이미지 고양과 지속적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국제 환경 및 평화봉사상 선점 시행으로 이미지 구축

2.6. 국제 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시행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우수 지역정책이 적지 않게 생산되어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로 활용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충남의 지역정책 경험을 외국 지방정부에 전수할 채널 확보 필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은 아직 우수 지역정책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축적기제를 갖추고 있지 않음 - 중앙정부와 서울, 강원 등 지자체는 정책 교류 채널을 갖고 있으나 충남은 없는 상황임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지역정책 경험을 국제교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KDI School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의 일부로서 충남의 정책경험을 체계화 - 단기적으로는 KDI School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채널을 운영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School이 매년 추진하는 KSP(기재부가 KDI School에 의뢰하여 추진)에 충남도가 의식적으로 참여 - 이를 계기로 충남의 지역정책경험을 정리하도록 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3억 - 연구 사업: 0.5억*2건(충남의 지역정책 경험 정리 및 연구) - 관련 세미나 개최: 0.1억*3회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School, 기재부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연구원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 있는 공무원과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하나,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기제가 없음(은퇴 공무원이나 연구원 활용)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외교 등 충남의 소프트파워의 첫걸음임 - 중앙정부의 KSP에 참여함으로써 충남의 지역 위상 제고

2.7. ‘외국인 눈에 비친 충남’ 콘텐츠 공모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만여 명에 달하여 이들은 충남의 인적, 문화적 자산이 될 잠재력이 높으나 이에 대한 플랫폼이 없음 -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충남을 통해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 기회를 보장하고 충남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 다양한 외국인 8만여 명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4위 규모임 - 중앙정부 차원(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2017년에 ‘톡톡 코리아 2017’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서울지역 관련 콘텐츠가 대부분임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거주 또는 충남 방문 외국인이 충남을 소재로 제작한 동영상, 사진, 디카시, 웹툰, 일러스트 등을 분야별로 공모하고 선정하여 시상 - 매년 개최하여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록 함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활동: 시행 방안 연구용역 수행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도청, 도의회 등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함(※공공기관은 상금 후원 방식으로 관여)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억 - 연구사업: 0.5억*1건 - 조직운영: 0.5억*1건 - 기타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주한중국문화원, 주한베트남대사관, 주한필리핀대사관 - 국내: 각 시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충남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주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어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주관 단체 확보 - 재미를 주는 창의적 방식 개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거주민의 충남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증진 - 충남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외국인의 간접적 참여 촉진

2.8. 여행 플래너 상호 파견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류 등 이유로 외국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증가했으나 충남은 ‘한류의 무풍지대’라고 할 만큼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적음 - 충남의 현실을 외국 관광객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여행자 유치를 위해 도나 시군차원에서 국제 홍보, 팸투어 등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음 - 관광객 유치 차원보다는 상호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파트너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상황임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지방정부가 전문 여행 플래너를 상호 파견하여 각 고객에 맞는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온라인 콘텐츠(한중일 3개 국어)로 올려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협회가 주관하고 충남도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 충남관광협회와 충남도가 상의하여 여행 플래너를 선정하고 이를 파트너 지방정부와 상호 파견하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4억 - 연구 사업(사업 추진방향 연구): 0.5억*1건 - 조직 운영(민관 컨소시엄 운영): 0.5억*1건 - 후원 활동(상호방문단 지원): 0.2억*12건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허베이, 구이저우성, 일본 쿠마모토, 시즈오카, 베트남 롱안성 등 - 국내: 충남관광협회, 충남 여행사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여행 플래너의 확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시각에서 충남 관광의 특화 방안 도출 - 충남 여행업계의 국제화 촉진


2.9.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이 유사한 국제적 위상을 갖는 각국 지방정부와 연합을 결성하여 국제무대에서 충남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함 - 이 연합은 충남의 주요 국제협력사업의 조직적 토대를 형성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국제기구나 회의 가입 수준은 16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타 지자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나 충남은 그러한 움직임이 없음
사 업 개 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 농촌지역에서 위성형 신산업지구로 변모한 충남의 정체성과 유사한 각국 지방정부와 정부간 연합체를 결성 - 연합체에서 공동의 정책의제 관련 교류와 협력을 펼치는 사업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정체성을 근거로 한중일(향후 만월몽까지 확대) 각국 지방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 초기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싱크탱크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 행동계획을 도출하여 지방정부 파트너십으로 발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6억 - 연구 사업: 1.0억*1건(충남 국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연구) - 관련 세미나 개최: 0.1억*6회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충북, 중국 허베이, 장수; 일본 쿠마모토, 시즈오카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연구원, 미래정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초기에 일본 측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역대학을 발견하고 교류하는 것이 어려움(중국과 한국은 공식 싱크탱크가 있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이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적 기반 확보 -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을 이끌 파트너의 확보

2.10. 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

필요성		- 충남의 과거 백제 문화교류를 모티브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시·군 지자체 교류를 축제 및 관광분야로 특화시켜 환황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교류 활성화
현 황		- 백제는 중국 및 일본, 동남아까지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고대 왕국으로, 1955년 시작된 백제문화제는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2017년 63회를 맞이하고 있음. 또한, 2016년 백제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됨. - 공주 및 부여 지자체 차원과 무령왕 네트워크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현재 진행 중 임.
사업개요	내용	- 충남의 백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한중일을 비롯하여 동남아 관광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방식	- 연구활동: 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네트워크 구축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백제문화권 국제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백제문화제추진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 세미나: 관광교류 실무진 세미나 및 워크숍, 국제세미나 - 백제문화제 연계 국제관광 박람회 개최
	예산	● 약 7억 - 연구사업 : 1.5억*2건 - 세 미 나 : 0.5억*2회 - 백제 네트워크 관광 박람회 : 3억(백제문화제 연계)
	협력 대상	- 국외: 중국 난징·뤄양, 일본 규슈·오사카·나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 - 국내: 서울(한성백제)
	추진 주체	- 경제통상실(기업통상교류과)·문화체육관광국(관광마케팅과)
애로사항		- 백제문화제를 통한 산발적인 국제교류를 지속화 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성 - 환황해 지방정부 간 지역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공생할 수 있는 공동의 의제 마련 필요
기대효과		- 기존의 ‘백제문화제’, 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충남의 국제 관광 수요 확대

2.11. 황해 갯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결성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황해 갯벌은 세계5대 갯벌에 꼽힐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산업화 충격이 가장 거센 지역 중 하나임- 황해 갯벌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환황해 모든 갯벌에 속한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임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2019년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충남 서천 유부도 등 금강하구 갯벌 또한 주요 구성 부분임- 황해 갯벌의 총 면적은 18,200km²(남한 2100, 북한 2300, 중국 동해안 8200, 발해 5700)로 세계 최대 규모이나 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소실되고 있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해 갯벌을 보유한 남한, 북한, 중국의 지방정부가 국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갯벌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교류사업과 협력사업을 전개하도록 함- 매년(또는 격년) 회원 지방정부들이 번갈아 개최하고 충남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제기구화 추진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활동: 타당성 용역 수행, 지방 정부 간 공동연구- 초기 2-3년간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간 실무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국제 네트워크 창설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9.0억- 연구사업: 1.5억*3건- 조직운영: 1.0억*3건- 기타활동: 1.5억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중국(장수성, 산둥성, 허베이성 등), 북한 지역(황해도, 평안도)- 국내: 인천, 경기, 전북, 전남 등- 정부 및 UN기구의 지원 확보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국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지자체간 주도권 경쟁 예방과 충남의 주도권 확보- 중국 지방정부의 무관심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UN기구의 지원 필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해 갯벌의 보존 및 복원의 실효성 증대- 충남의 국제 해안 환경 이니셔티브 확보- 북한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채널 확보		

2.12. 환황해 유교로드(Confucian Road) 구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및 충청유교문화원 설립 추진 중으로 충청을 중심으로 환황해 유교로드를 구축함으로써 충청유교 자원의 국제화 및 유교관광 활성화 도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산둥성 및 강남지역 유교문화자원 다수, 일본 및 베트남 등 공자사당 등 유교문화유산 산재함. - 충남, 충북, 세종, 대전 4개 광역시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중이고, 충남도와 논산시가 충청유교문화원 설립 추진 중임.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유교문화 거점과 환황해권 타 지역 유교문화 거점 간 다층적인 인문교류 루트를 조성함으로써 인적교류 및 관광교류 활성화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 3건 환황해 유교로드 거점 구상연구(한중일 공동연구), 유교로드 인문교류 사업 추진(한중일 및 동남아 지방정부), 환황해 유교로드 핵심사업 발굴(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 세미나: 한중일 국제세미나, 대만·홍콩·베트남 등 동남아 국제세미나, 국내 세미나 - 유교로드 순환형 국제 전시회 개최, 유교문화예술 활동 교류 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9억 - 연구사업: 1.5억*2건 - 세 미 나: 2.0억*1회, 0.5*1회 - 인문교류 전시회 및 문화교류: 3.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둥성 곡부·구이저우성 귀양, 일본 도쿄(공자사당), 대만 타이난(공자묘), 베트남 하노이(공묘) 등 - 국내: 경상북도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 지방정부 순환형 행사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전략마련 - 환황해 유교로드 사업의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의제'설정 및 환황해 지방정부 참여 유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 유교로드 구축을 통한 충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환황해 유교 인문교류 확산 및 충청유교 자원의 국제화 도모

2.13. 환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환황해 각 지역 전통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통마을과 자원의 국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에는 외암 민속마을이 대표적인 전통마을로 보존이 되고 있음.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처럼, 충남 외암 민속마을의 경우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요구됨. - 중국과 일본 등 자매결연 지방정부에도 전통마을이 보존되고 있어서 전통마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전통자원 국제화가 필요함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외암 민속마을과 중국 및 일본의 전통마을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한중일 전통자원 국제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 충남의 술, 모시, 각 지역 특산물 국제마케팅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 한중일 전통마을 네트워크 구축 연구(한중일 공동연구), 외암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전통마을 자원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 세미나: 한중일 국제세미나, 한중 세미나, 국내세미나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8.5억 - 연구사업(파트너 지역의 사례 조사 및 추진방향 연구): 1.5억*3건 - 세 미 나: 0.5억*4회 - 전통마을 교류행사 : 2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둥성(저우춘, 모씨춘)·구이저우성(청암고진), 일본 구마모토현 전통마을 등 - 국내: 경북 안동시·경주시
	추진 주체	-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목표 설정 - 한중일 민관학연 간의 상호간 역할 배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마을을 매개로 한 한중일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전통자원 발굴 및 마케팅 - 충남 외암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력 확보

3. 환황해 평화를 위한 핵심사업

〈표 4-6〉 환황해 평화를 위한 핵심사업

구 분	사업명	설 명	비고
미래이슈 의제화	24)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25)대학 간 학점 상호인증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와 친선 대학 간 국제 협력 활성화	시군 주도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자원의 국제화	26)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27)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28)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격렬비열도를 서해의 독도로 지위 격상 귀화 성씨의 역사, 스토리 집대성 박물관 충남 자연환경을 매개로한 국제 민간 교류	연구 축적 필요 온라인부터 시작 낚시협회 주도
국제무대 세력화	29)환황해포럼 진화 30)환황해연구원 설립	국가지원 받는 지방주도 포럼으로 안착 정부, 지자체 공동으로 특화 연구소 설립	순회개최 추진 지역 대학 주도

3.1.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간 청소년들간 홈스테이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미래세대간 공존공생을 위한 공감대 형성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한-일간 청소년들이 문화, 스포츠, 홈스테이를 통해 상대국을 체험하는 행사는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한-중-일간 청소년 홈스테이를 3국이 순회하면서 추진된 사례는 없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개국 청소년들이 순회하면서 홈스테이를 통해 교류 - 각국의 전통문화, 스포츠, 일상생활을 소개 및 체험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 1건의 한중일 3국 홈스테이 프로그램 개발(한중일 공동연구)지원 연구(충남연, 역사문화연 등) - 시범사업: 한중일 청소년들이 시범 홈스테이 시행 - 본 사업 : 한중일 청소년들간 순회 홈스테이 시행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6억 - 프로그램 개발: 1억*1건 - 시범사업 : 0.2억*3회 - 본 사업 : 3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산둥성, 일본 구마모토 등 - 국내: 대전, 세종시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팀)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성 이벤트에서 탈피하여 홈스테이의 지속적 추진 담보방안 -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홈스테이시 안전사고 및 질환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합의 어려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청소년네트워크 형성 - 동북아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영에 기여

3.2. 대학 간 교과과정 학점 인증 및 교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절부터 국제경험이 중요함 - 대학생들의 국제 경험과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대학 간 교과과정 학점 상호인증 및 교류가 중요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의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이 중앙차원에서 실시(2011-2015), 2016년 확대 추진 결의(한국 9개 대학 참여) - 충남소재 일부 대학들은 학점 및 학위 상호인증 교류에 나서고 있음(청운대 중국어과는 텐진공업대학교, 내몽고사범대학교 등과 2+2와 3+1 유학제도 실시 중)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차원(충남 또는 충청권)에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수학위, 학점 인정을 실행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중앙차원의 수행방식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0.6억 - 관련 세미나 개최: 0.1억*6회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일본의 지역 대학들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소재 대학들 간 국제교류 활성화 단계가 상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려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 대학생의 국제 마인드 함양 - 교육 분야 지속가능한 교류 정착

3.3. 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격렬비열도의 자원 가치 향상이 효과적인 국토이용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음 - 환황해권 시대에 걸맞는 충남의 해양자원 관리와 해양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렬비열도 해역에는 옹도, 궁시도 등 14개의 무인도서가 연이어 분포하나 접근성이 불리하고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관광 여건이 미흡 - 격렬비열도의 개발방향을 해양환경연구 및 관광자원개발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해양수산국, 2015)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도서로서의 독특한 자연경관 유지관리 - 접근성 개선을 통한 해양 교통거점 역할 - 수산자원 및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시설물 입지와 관리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렬비열도 해상길 및 거점도서 자원화 방향은 역사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련한 해상항로(sea silk road)로서의 백제사신길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무인도서 자연생태 가치를 활용하는 생태관광으로 설정 - 해양영토 방위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 타당성 검토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억 - 전략방향 연구 : 1.5억×2식 - 자원조사(생태환경 및 자원 조사) : 2억×1식 - 세미나: 0.5억×2회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동부권역(산둥성, 장수성, 허베이) 등 - 국내: 인천시, 경기도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렬비열도가 영해기선 도서이므로 국토방위와 국제교류항 거점 역할과의 상충성 존재 - 중국 외에 일본은 백제사신길이 갖는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렬비열도를 서해 해양영토 및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부각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

3.4. 귀화 성씨 박물관 건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성씨는 한국인의 일부이자 글로벌 한국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음 - 귀화 성씨 자료를 집대성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충남의 글로벌 마인드 진작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50여 개 성씨 중 절반 이상이 귀화 성씨로 알려져 있음. 비중으로는 중국계,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아랍계, 베트남계, 일본계 순임. 또한 최근 귀화 성씨는 400여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음 - 귀화 성씨의 뿌리찾기는 주로 문중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연구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
사업 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문화의 관문 역할을 해 온 충남 내포에 귀화성씨 박물관을 건립하고 주요 귀화 성씨의 연구를 통해 귀화 역사를 발굴하고 새로운 귀화 성씨 기록을 축적하는 사업 - 역사 속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급증하는 21세기 귀화성씨 자료를 콘텐츠화하는 기반 마련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 온라인 박물관을 만들고 자료를 축적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오프라인 박물관을 설립 - 충남의 귀화 성씨를 먼저 연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한산 정씨, 면천 복씨, 아산 호씨, 신창 맹씨 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0억(※박물관 건립비용은 별도로 계상) - 연구 활동(박물관 타당성 검토 및 실태조사 등): 0.5억*3건 - 자료 조사 수집 활동: 1.0억 - 기타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각지의 원 성씨 문중 조직 - 국내: 각 귀화성씨 문중, 향토학자 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의 경쟁 극복 -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조직의 확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글로벌화 관련 문화콘텐츠 확보 및 관광자원 기반 마련 - 외국인을 포용하는 지역 문화 장려

3.5. 동아시아 낚시인 친선 대회 개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은 대형 담수호와 해안이 많아 낚시를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충남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대중 레저문화인 낚시를 매개로 한중일만 4국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자 함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700만 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으며, 다양한 동호회 그리고 협회조직이 있음. 낚시 대회가 매년 수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충남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지역임. - 2016년 경북 안동시가 중국 낚시인을 초청하여 안동호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호응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낚시인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낚시인들이 상호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낚시대회를 순회 개최(제1회 낚시대회를 충남이 주최) - 대회가 활성화되면 관련 기자재 산업전시회, 어류 디자인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 한중일 낚시 대회 개최의 타당성, 입지 선정, 낚시 대회의 발전 방향 연구(외부 학술용역 발주) - 국제 협력: 한중일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지방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대회 개최(※낚시대회 참가는 유료이며, 지방정부는 상금 후원)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7억 - 연구 사업: 0.5억*2건 - 대회 후원: 0.2억*1건 - 기타 활동: 0.5억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허베이, 장수성, 일본 구마모토현 등 - 국내: 전국 낚시인협회, 충남 낚시인 협회
	주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주관 단체 확보 - 복합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 애호가들의 참여를 통해 국제 교류 촉진 - 충남의 외국인 대상 복합관광의 모델 탐색 및 구축

3.6. 환황해포럼 진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3회 개최되는 환황해 포럼은 그 성격의 모호성, 기반 조직의 부재 등 문제로 불확실성에 봉착해 있음 - 발전적 진화 방향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교체 등으로 인해 포럼이 존폐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포럼은 충남이 주도하고 지역의 명사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중임 - 포럼에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참여는 거의 없으며, 제주포럼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장래가 불투명함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포럼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지방정부협의체로 진화하기 위해 포럼을 뒷받침할 충남의 파트너십 구축과 사무국 기능을 갖춘 후 파트너 간 순회 행사로 수행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을 뒷받침할 충남의 지방정부협의체 결성(아시아 신공업지역연합 등)과 포럼 사무국기능 확보 - 환황해포럼 정착 후 협의체 구성원 간 순회 방식으로 전환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2억 -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0.2억*4회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아시아 신공업지역연합과 동일)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본부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7기 도정 출범에 따른 포럼의 연속성 확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포럼의 정착으로 포럼의 연착륙 달성 - 충남의 환황해 시대 지위 격상

3.7. 환황해연구원 설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굴기에 따라 중국 연구 및 인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벅찬 상황임 - 중앙과 지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준국책연구기관으로서 환황해연구원을 설립하여 중국 연구 및 인맥 관리의 허브로 정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중앙과 지역이 합작하여 설립하는 국제지역연구소가 없는 상황임. '환동해포럼'도 학술포럼 행사를 대학교 위탁 방식으로 진행 -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출자하여 『환동해연구소』(니가타 소재)를 설립하여 북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에 대응하고 있음
사업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출자하여 환황해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환황해권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추진 - 중국 '황해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우호적인 국제협력 분위기 조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3.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20억 - 연구용역: 1.5억*2건 - 연구조성: 0.2억*6회
	협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중국 '황해연구소' - 국내: 중앙정부(국책연구기관)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반응에 따라 결과 가변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연구역량의 획기적 개선 - 충남의 중국연구 역량의 강화

제4절 전략의 추진체계

1. 총괄 추진 조직 설립의 필요성

1.1 현재 충남 외교 관련 기능은 분산되어 있음

- 도 조직에서는 기업교류통상과와 환황해팀으로 분리되어 있음
 - 기능별로는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국제교류 등 통상업무와 국제교류 업무는 기업교류통상과가 수행
 - 국제 글로벌화 전략 수립 및 추진, 환황해포럼 운영 등은 환황해팀이 수행
 - 기타 다양한 국제교류는 개별 부서가 담당하고 있음(한중일 3농 포럼, 탈석탄 국제포럼 등)
- 『공공외교법』(2016.8)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도 통일적인 공공외교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인해 각 시도는 각년도 공공외교 계획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경기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움직임이 있음

1.2 민간외교의 중요성 부상

-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음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2017년3월21일자로 제정, 민간교류 촉진의 법적 기반 마련
 - 공공외교는 민간교류를 뿌리로 할 때,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민간 차원의 외교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민간외교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도 꾸준한 국제교류가 추진되고 있음
 - 시군 차원의 민관협치 외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국제교류 역량은 취약한 상황
 - 시군마다 국제교류 조직 및 인력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2. 중장기 충남 외교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2.1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상설 조직 필요

- 글로벌화 전략의 성격상 TF나 협의체보다는 상설 조직 필요
 - 사업 단위의 협력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의 외교전략 수립 및 수행 조직이 필요한 시점
 - 국제교류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의 안정화가 필수적인 바, 순환보직 방식으로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축적에 한계
- 공공부문 각 부서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실무 지원 기능은 부차적임
 - 도청의 모든 부서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 문제는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 상설 조직은 실무지원보다 국제교류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2.2 조직형태로는 ‘충남국제교류재단’ 이나 ‘충남글로벌화센터’ 를 제안함

- 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와 민간외교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가짐
 - 국제교류재단은 도가 출연한 재단으로서 도청 부서와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
 - 그 기능은 공공외교와 민간외교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짐
 - 대전시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글로벌화센터는 공공외교 주도 성격을 갖는 도청의 조직임
 - 국제교류재단과 달리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도청의 일 부서로서 존재
 - 그 기능은 공공외교 계획 수립 및 수행 그리고 민간외교 지원 등 역할을 수행
 - 강원도 등이 이러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음

구분	충남국제교류재단	충남글로벌화센터
위상	독립된 법인	법인 아닌 도청 조직
장점	조직의 안정성 확보 전문성 축적 가능	도와의 협력 용이
단점	공공부문과의 협력 느슨	조직의 지속성 담보 취약 전문성 축적 한계

3. 환황해 포럼의 진화 방향

3.1 환황해포럼의 진화방향에 관해 3가지 방안이 제시됨

- 제1방안은 국가 지원 받는 지방정부 주도 국제포럼임
 - 국가 차원의 필요성 공감대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함
 - 제주도의 ‘제주포럼’ 과 같은 방식임
 - 충남의 주도성 확보가 용이하나 타 지자체의 비협조, 막대한 자원 투입 등 단점
- 제2방안은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협의체임
 - 충남의 기득권 양보와 타 지방정부의 참여와 호응을 전제로 함
 - 타 지방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쉬우나 충남의 주도성 약화, NEAR와의 위상 중복됨
- 제3방안은 부문별 지방정부 연합체임
 - 충남과 유사한 위상을 갖는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
 - 종합적인 포럼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공통관심사를 위주로 포럼 운영
 - 이 경우 환황해포럼이라는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야 함
- 환황해 특위는 제1방안에서 제2방안으로 진화하는 것을 바람직한 반향으로 제시
 - 환황해포럼의 기반을 공고히 한 후 환황해권 지방정부 협의체로 진화하는 것을 이상적인 발전 방향으로 제시

구분	1방향	2방향	3방향
비 전	국가 지원 받는 지방정부 주도 국제포럼	(명실상부한)환황해권 지방정부 협의체	부문별 지방정부 연합체
전 제	국익 차원의 필요성 인식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제주 포럼)	충남의 기득권 양보와 타 지자체(지방정부)의 호응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들의 호응과 파트너십 구축
장 점	충남 주도성 확립	경기도 등 타 지자체 호응 끌어내기 쉬움	충남의 주도성 확보 용이
단 점	- 타 지자체의 반발 - 막대한 자원 투입	NEAR와 위상 중복	‘환황해 포럼’ 명칭 수정

3.2 환황해포럼 사무국 기능 조직의 확보

- 총괄 추진 조직 설립 전 사무국 기능 조직을 확보해야 함
 - 현재 환황해포럼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사무국기능의 절실함(특위 자문)
 - 타 초국경국제협력 사례에서도 사무국 등 지원 조직의 뒷받침이 필수불가결
 - 충남연구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특위 자문)

-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충남이 장차 고도의 선택성이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조직은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함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 연구책임

홍원표 책임연구원

- 연구진

송두범 수석연구위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

유학열 연구위원

강수현 연구원

필위녕 연구원

- 연구자문

이상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